

2021년 10월 조사

Executive Summary

K I N U
통일의식
조 사
2 0 2 1

- 미중갈등의 인식

연구책임자

이상신

통일정책연구실장/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민태은(평화연구실 연구위원)

윤광일(숙명여대 교수)

구본상(충북대 교수)



차례

I . 서론	7
1. 연구 목적과 조사 소개	8
2. 코호트 분석	9
3. 조사 개요	9
4. 조사 결과 요약	10
II . 남북관계 현안과 여론	13
1. 종전선언과 남북교류	14
2. 남북관계의 전망	17
3. 남북한 합의 계승	18
4. 남한 핵개발과 미국 핵 재배치	19
5. 주한미군 주둔 vs. 핵무기 보유	23
III . 한미관계 현안과 미국인식	25
1. 한미관계 평가	26
2. 한미동맹의 필요성	27
3.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 현재와 통일 이후	29
4.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개선	31
5. 북미정상회담 재개	32
6.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34
IV . 주변국 인식과 미중관계에 대한 평가	35
1. 주변국 호감도	36

2. 통일을 가장 바라지 않는 나라	38
3. 가장 위협적인 주변국가	39
4. 대미·대중 외교 정책 방향	40
5. 한국의 안보와 미중	42
6. 한국의 경제와 미중	43
7. 미국의 리더십 중요성 변화	44
8. 국제사회 리더로서의 미국	46
9. 국제사회 리더로서의 중국	48
10.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49

V. 한중관계와 중국인식 51

1. 중국인식: 민주적 가치	52
2. 중국인식: 경제적 이익	53
3. 중국인식: 역사 및 문화	55
4. 중국과 한반도 통일	57
5. 한중관계 이슈: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중국의 책임	58
6. 한중관계 이슈: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한 대응	60
7. 한중관계 이슈: 중국의 역사적 왜곡 시도	62
8. 한중관계 이슈: 홍콩 민주화 운동과 한국	63
9. 한중관계 이슈: 중국의 대만 병합	65

표 차례

<표 I - 1> KINU 통일의식조사 조사기간 일람(2014~2021년)	8
<표 I - 2> KINU 통일의식조사의 한국 사회 코호트 분류	9
<표 I - 3> 2021년 10월 조사 개요	9
<표 III - 1> 한미동맹 필요성: 지지정당별 (%)	28
<표 III - 2> 북미정상회담 재개 찬성: 지지정당별 비교 (%)	33

그림 차례

<그림 II - 1> 종전선언과 남북교류	14
<그림 II - 2> 올림픽 종전선언 정당별 비교	15
<그림 II - 3> 종전선언 정당별 비교	15
<그림 II - 4> 남북정상회담 재개 정당별 비교	16
<그림 II - 5> 코로나 백신 지원 정당별 비교	16
<그림 II - 6> 남북관계 5년 전망	17
<그림 II - 7> 남북한 합의 계승 찬성	18
<그림 II - 8>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의견	19
<그림 II - 9> 미국 핵 재배치에 대한 의견	20
<그림 II - 10> 통일 이후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의견	21
<그림 II - 11>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한 의견	22
<그림 II - 12> 주한미군 주둔 vs. 핵무기 보유: 지지정당별 비교	23
<그림 III - 1> 한미관계 평가	26
<그림 III - 2> 한미동맹의 필요성	27
<그림 III - 3>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 현재와 통일 이후	29
<그림 III - 4>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개선	31

<그림 III - 5> 북미정상회담 재개	32
<그림 III - 6>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34
<그림 IV - 1 > 주변국 호감도 2018~2021년	36
<그림 IV - 2 > 통일을 가장 바라지 않는 나라 2018~2021년	38
<그림 IV - 3> 가장 위협적인 주변국가: 이념별 비교	39
<그림 IV - 4> 대미·대중 외교 정책 방향 2018~2021년	40
<그림 IV - 5> 한국 안보: 미중 상대적 중요도 2018~2021년	42
<그림 IV - 6> 한국 경제: 미중 상대적 중요도 2018~2021년	43
<그림 IV - 7> 미국의 리더십 중요성 변화	44
<그림 IV - 8>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참여	45
<그림 IV - 9>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 역할 평가 2019~2021년	46
<그림 IV - 10> 중국: 국제사회 리더 역할 2019~2021년	48
<그림 IV - 11> 미중 패권 선호 2020~2021년	49
<그림 V - 1> 중국인식: 민주적 가치 존중	52
<그림 V - 2> 중국인식: 경제적 이익 상충	53
<그림 V - 3> 중국인식: 역사 및 문화	55
<그림 V - 4> 중국과 한반도 통일	57
<그림 V - 5> 코로나19 확산의 중국 책임: 이념별 비교	58
<그림 V - 6>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적극 대응 필요성: 이념별 비교	60
<그림 V - 7> 한국의 대응능력 보유 평가: 이념별 비교	61
<그림 V - 8>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강력한 대처 필요성: 이념별 비교	62
<그림 V - 9> 홍콩 민주화 운동과 한국: 이념별 비교	63
<그림 V - 10> 중국의 대만 무력병합 저지 필요성: 이념별 비교	65

Executive Summary



Executive Summary



I 서론

I. 서론

1. 연구 목적과 조사 소개

■ KINU 통일의식조사는 대면조사(face-to-face survey)를 통해,

- (1) 국민들의 통일, 북한, 통일·대북정책, 북한이탈주민, 남북통합과 안보관,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를 연구하고,
- (2) 이러한 인식을 결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히며,
- (3)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통일·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KINU 통일의식조사 소개

- KINU 통일의식조사는 2014년부터 자료를 축적해왔음. 2019년부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차례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상반기 조사는 통일, 북한, 그리고 남북관계, 하반기 조사는 주변국 인식 및 안보를 주제로 조사함.
- 본 요약보고서에서 별도의 표기가 없다면 2021년 10월에 조사된 자료의 통계임.

<표 I - 1> KINU 통일의식조사 조사기간 일람(2014~2021년)

조사차수	조사연도	조사기간
1	2014년	9월 22일~10월 6일
2	2015년	7월 27일~8월 14일
3	2016년	6월 2일~6월 24일
4	2017년	3월 21일~4월 14일
5	2018년	4월 5일~4월 25일
6	2019년 1차	4월 5일~4월 25일
7	2019년 2차	9월 7일~10월 8일
8	2020년 1차	5월 20일~6월 10일
9	2020년 2차	11월 10일~12월 3일
10	2021년 1차	4월 26일~5월 18일
11	2021년 2차	10월 21일~11월 22일

2. 코호트 분석

■ KINU 통일의식조사의 코호트

- KINU 통일의식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의 탄생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코호트 분류법을 사용하고 있음. 코호트 분류는 기존연구들을 문헌조사하여 결정하였음.

<표 I - 2> KINU 통일의식조사의 한국 사회 코호트 분류

코호트	탄생년도	조사빈도 (2021년 10월)	비율(%)
전쟁세대	1950년 이전 출생	92	9.2
산업화세대	1951년~1960년	176	17.5
386세대	1961년~1970년	199	19.8
X세대	1971년~1980년	180	17.9
IMF세대	1981년~1990년	172	17.1
밀레니얼세대	1991년 이후 출생	187	18.6
합계		1,006	100.0

3. 조사 개요

<표 I - 3> 2021년 10월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2021년 9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표집
표집방법	2021년 9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근거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표본단위	총 1,006명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조사방법	대면면접조사 (PI: Personal Interview)
조사기간	2021년 10월 21일 ~ 11월 22일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4. 조사 결과 요약

■ 남북관계 현안과 여론

- 종전선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호응이 확인됨. 야당 지지자들 또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영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을 지지함.
 - 국민의힘 지지자의 70%가 올림픽 종전선언을 찬성함. 종전선언 또한 68.6%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찬성함.
- 남북관계는 현상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72.6%의 응답자가 향후 5년 동안 남북관계는 현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이는 이 문항 조사 이후 최고 수준임.
- 전체 응답자의 70.2%가 정부 교체와 무관한 남북한 합의 계승에 찬성함. 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자의 70.3%도 이에 동의함.
- 한국의 독자적 핵보유에 대한 찬성 의견이 꾸준히 증가함. 2021년 10월 조사에서는 71.3% 기록함.
 - 미국 핵 재배치 찬성의견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 등의 영향으로 2019년 하락했으나 (53.1%) 이후 다시 증가했음. 현재는 61.8%임.
 - 통일 이후 핵무기 보유, 핵추진 잠수함 개발 필요성 등의 사안에도 다수가 찬성함.
- 그러나 핵보유 보다 동맹을 통한 안보를 선호하는 경향도 발견됨. 주한미군과 핵보유 중 선호를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의 약 50%가 주한미군 주둔을 선택함.

■ 한미관계 현안과 미국인식

-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정상외교로 복귀하고, 우리와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해결 하면서 한미관계의 부정적 평가가 감소하는 추세임.
- 한미동맹 필요성에 대한 전국민적인 공감대 재확인함. 93%의 응답자가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 국민의 지지는 매우 확고하고 안정적인임.
- 주한미군의 현재 한반도 주둔 필요성에 대해서 약 90%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통일 이후에도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약 61%임. 그러나 통일 이후 미군 주둔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이 지난 4월 조사에서보다 약 10%p 증가함.

- 66.9%의 응답자가 한미동맹 강화가 남북관계 개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우리 국민이 한미동맹이 제공하는 경제·정치·군사적 안정감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임.
- 북미정상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가 증가함. 이번 조사에서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긍정적 응답이 지난 조사보다 약 5%p 증가한 74.9%로 나타남.
-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와 관련,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현 수준의 미국의 대북 제재가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데 일정 정도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 가능함.

■ 주변국 인식과 미중관계에 대한 평가

- 주변국 중 동맹국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음. 응답자 66.2%가 미국에 호감을 갖고 있음. 반면에 중국(12.5%)과 러시아(12.2%)에 대한 호감은 낮게 나타남.
- 가장 통일을 원하지 않는 나라로 중국이 꼽힘. 2018년 조사 시작 이래 처음으로 절반을 훌쩍 넘는 59.6%의 응답자가 중국을 통일에 부정적인 나라로 인식함.
- 주변 4개국 중에 한국의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로 압도적인 다수가 중국을 선택(71.8%)함.
 - 중국의 전랑외교 등 강압적이고 주변국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홍콩 민주화 운동 탄압 및 대만에 대한 압력 등이 중국을 위협적으로 느끼게 하고 있음.
- 한국 국민들은 미중 간 균형외교를 가장 선호함. 그러나 균형외교보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선호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1년 10월 조사에서는 31.1%에 달함.
- 한국 국민들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중국보다 미국이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미국의 세계 리더십에 대한 실망감이 증가하고 있음.
 - 50% 이상의 응답자가 지난 10년 전에 비해 세계 리더로서 미국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답함.
- 미국의 세계질서 유지에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이 감소하는 추세임. 비교적 젊은 코호트의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가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더 이상 당연하거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함.

■ 한중관계와 중국인식

- 2018년 이해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미국에 대한 호감도와 격차가 커지고 있음.
- 중국이 민주적 가치를 잘 준수한다고 보는 한국인 비율은 극소수에 불과함. 이는 한국 내에서 민주적 가치가 강조될수록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에 대한 긍정 인식 가능성(협력 및 중국시장)이 드러나지만,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위협 인식이 혼재하고 있음. 특히,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기반 약화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중국발(中國發) 미세먼지 논란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역사 및 문화: 응답자 다수가 중국이 주변국 역사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중국 자본을 통해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에 대한 의견은 팽팽하게 갈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우리 문화 수준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일 수 있음.
- 통일: 남북한 통일과 관련해 한국인은 중국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한국인의 대다수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평화적 통일로 갈 수 있으리라 보지 않음.
- 중국 관련 쟁점에 대한 태도를 분석했을 때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연령 혹은 세대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음. 즉 청년층이 더 중국에 부정적이거나 중년층이 더 긍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그보다는 이념 같은 개인의 성향이나 소프트 파워(soft power)라 할 수 있는 문화 수준에 대한 평가가 중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더 뚜렷한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됨.
- 코로나19 확산 책임: 통념과는 달리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오히려 진보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은 진보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또한, 진보층에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견딜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보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진보는 친중국(親中國), 보수는 반중국(反中國)이라는 단순한 도식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확인함.
-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에 동의한 비율이 진보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중국의 대만과 홍콩 대응: 응답자들은 홍콩 민주화 운동과 대만 무력 병합 저지를 같은 맥락에서 보지 않음. 홍콩과는 달리 대만을 중국과 다른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응답자 과반이 중국의 대만 무력 병합을 저지하는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음.

Executive Summary

K I N U
통일의식
조사
2 0 2 1



II

남북관계 현안과 여론

II. 남북관계 현안과 여론

1. 종전선언과 남북교류

<그림 II - 1> 종전선언과 남북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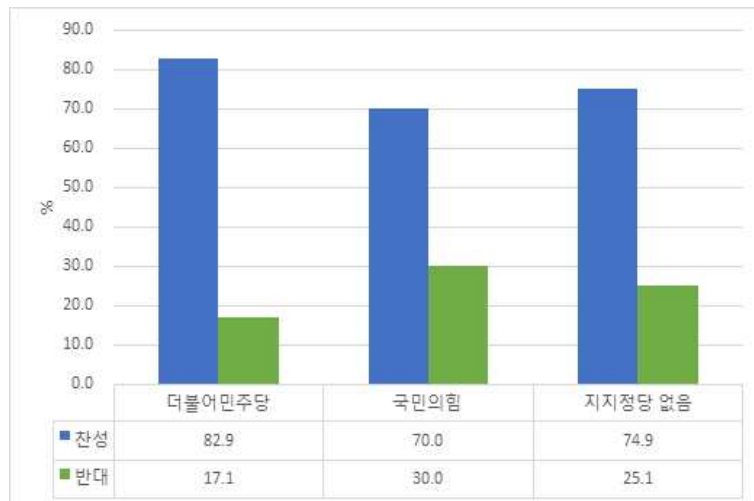
■ 조사 문항

- 올림픽 종전선언 - "2022년 2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이 올림픽에서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네 나라의 정상이 만나 한국전쟁을 끝내는 종전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전선언 - "한국정부는 미국정부가 종전선언을 통해 휴전상태로 남아있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 남북정상회담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정상회담을 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코로나 백신 지원 - "한국이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네 문항 모두 4점 척도로 측정(1=매우 찬성, 2=다소 찬성, 3=다소 반대, 4=매우 반대)
 - 1과 2를 합해 "찬성", 3과 4를 "반대"로 코딩하여 위의 그래프에 표시함.

■ 종전선언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인

- 종전선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호응이 확인됨. 지지 정당별로 올림픽 종전선언과 종전선언에 대한 반응을 비교해보아도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 국민의힘 지지자의 70%가 올림픽 종전선언을 찬성함. 종전선언 또한 68.6%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찬성함.
- 이 조사가 진행될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마무리되어 야당의 결집이 이루어진 시기라는 것을 고려하면, 야당 지지자들 또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영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있는 것임.

<그림 II - 2> 올림픽 종전선언 정당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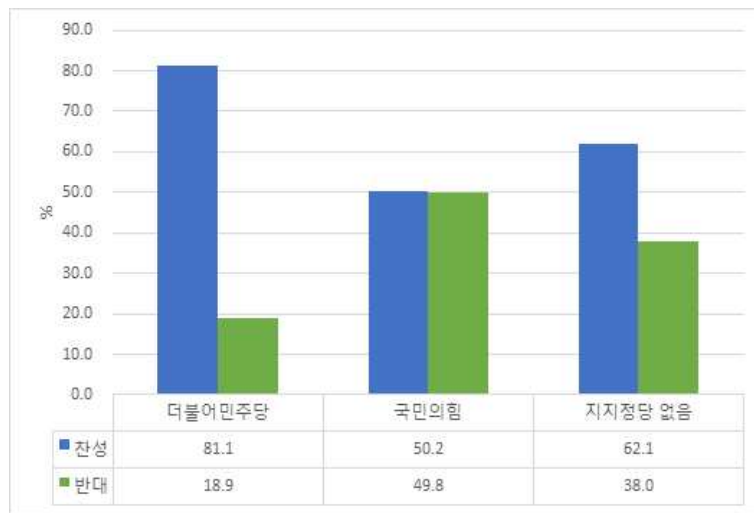
<그림 II - 3> 종전선언 정당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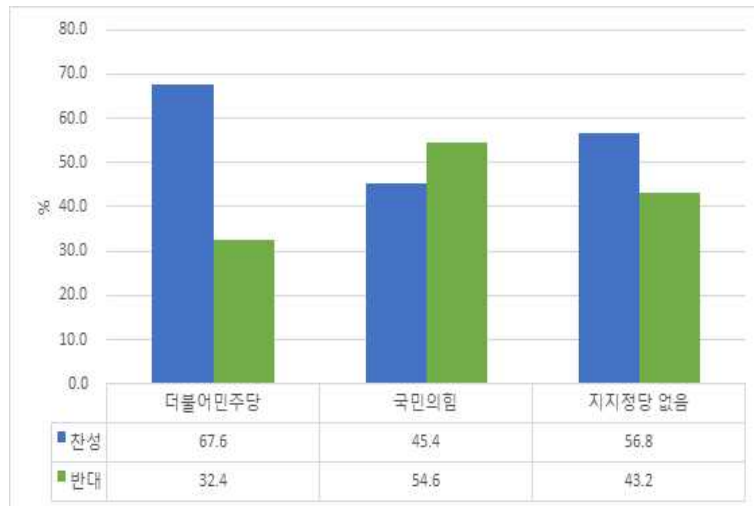
■ 남북정상회담과 코로나 백신 지원에 대한 엇갈린 여론

- 종전선언에 대해 야당 지지자들의 과반수가 찬성한 것과 대조적으로, 남북정상회담과 코로나 백신 지원에 대해서는 지지 정당에 따라 의견이 갈림.
 - 남북정상회담 재개에 대해 81.1%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찬성함. 반면 야당 지지자들은 50.2%가 찬성함.
 -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에 관해서 야당 지지자의 과반이 넘는 54.6%가 반대함.

<그림 II - 4> 남북정상회담 재개 정당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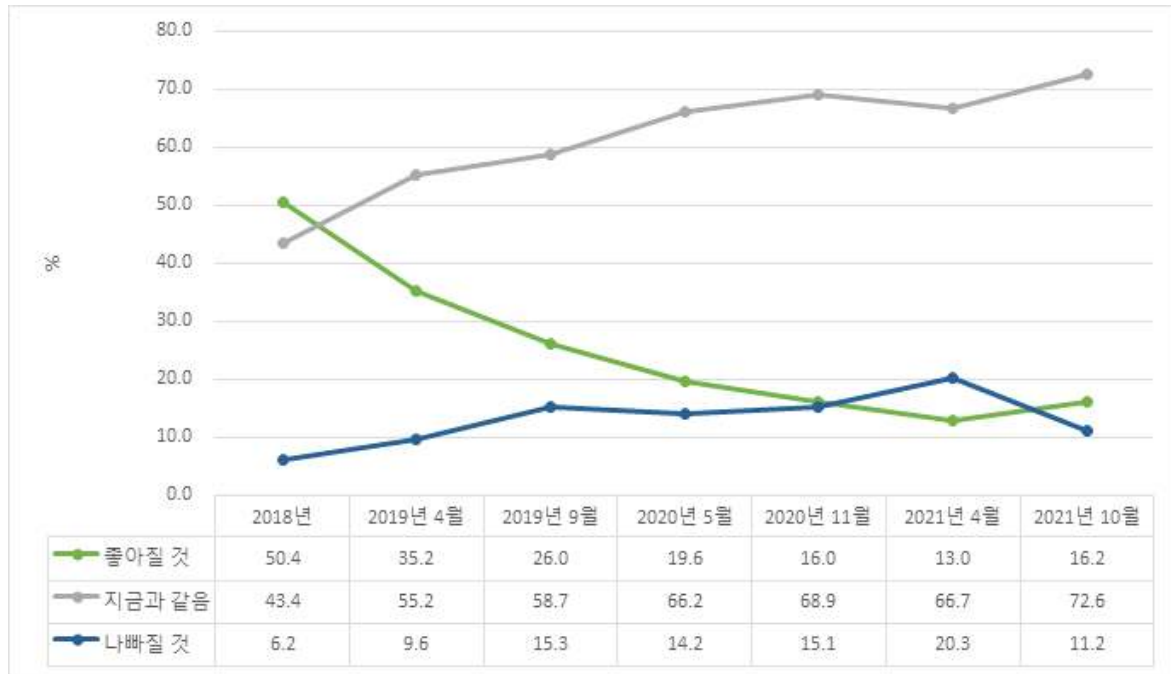


<그림 II - 5> 코로나 백신 지원 정당별 비교



2. 남북관계의 전망

<그림 II - 6> 남북관계 5년 전망



■ 조사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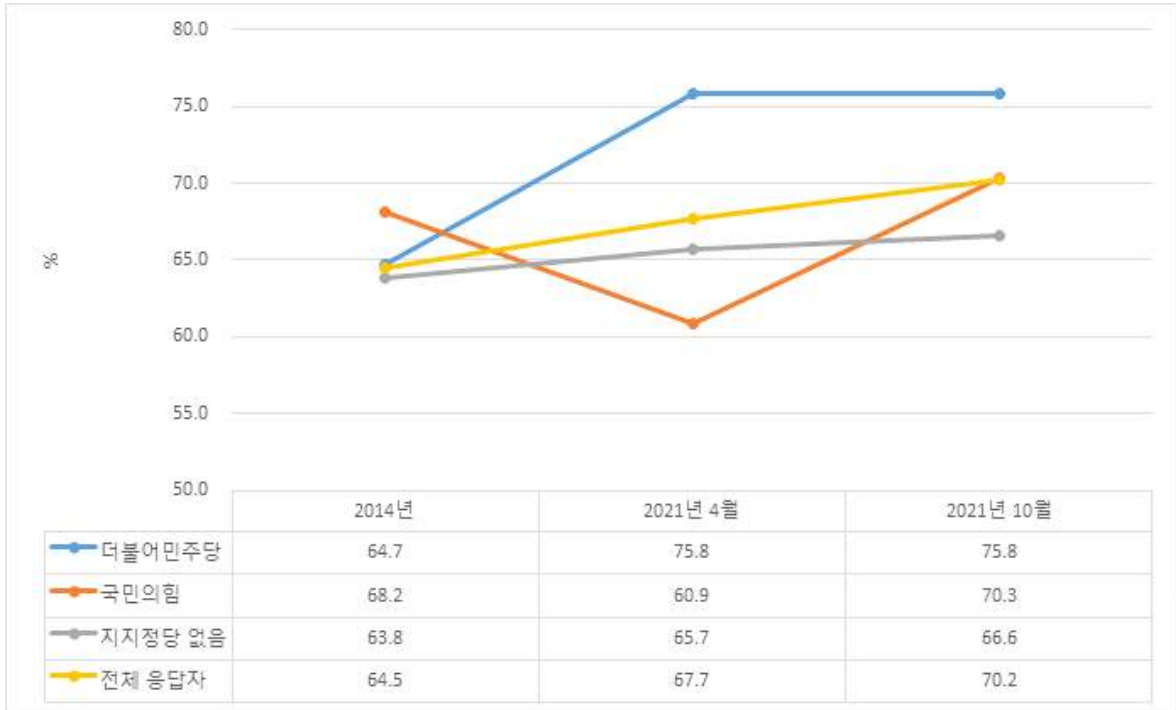
- “앞으로 5년간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지금보다 매우 나빠질 것; 2=지금보다 다소 나빠질 것이다; 3=지금과 같을 것이다; 4=지금보다 다소 좋아질 것이다; 5=지금보다 매우 좋아질 것이다.
 - 1과 2를 합쳐 “나빠질 것”, 4와 5를 합쳐 “좋아질 것”으로 코딩하여 위의 그래프에서 표시함.

■ 남북관계 현상유지 전망 우세

- 2021년 10월 조사에서 72.6%의 응답자가 향후 5년 동안 남북관계는 현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이는 이 문항 조사 이후 최고 수준임.
- 좋아질 것, 혹은 나빠질 것에 대한 전망은 각각 16.2%, 11.2% 였음. 지난 4월 조사에 비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약간 늘었으나 큰 증가라고 볼 수는 없음.
- 문재인 대통령의 9월 유엔 연설 이후 북한이 남북통신선을 복원하는 등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었으나, 2019년 이후 남북관계의 갑작스러운 경색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남북관계 복원에 대해 회의적인 경향임.

3. 남북한 합의 계승

<그림 II - 7> 남북한 합의 계승 찬성



■ 조사 문항

- “남북한이 체결한 합의 사항은 정부의 교체와 무관하게 계승되어야 한다”
 - 1=매우 찬성; 2=다소 찬성; 3=다소 반대; 4=매우 반대
 - 1과 2를 합해 “찬성”으로 코딩 후, 지지정당별로 비교하여 위의 그래프에 표시함.

■ 대통령 선거 이후 남북한 합의 계승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존재

- 2021년 10월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0.2%가 정부 교체와 무관한 남북한 합의 계승에 찬성함. 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자의 70.3%도 이에 동의함.
- 지난 4월 조사와 비교해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계승 동의가 60.9%에서 70.3%로 상승함. 이는 야당 지지자들이 결집되면서 중도 우파의 유권자들이 야권에 합류하고, 좀 더 온건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4. 남한 핵개발과 미국 핵 재배치

<그림 II - 8>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의견



■ 조사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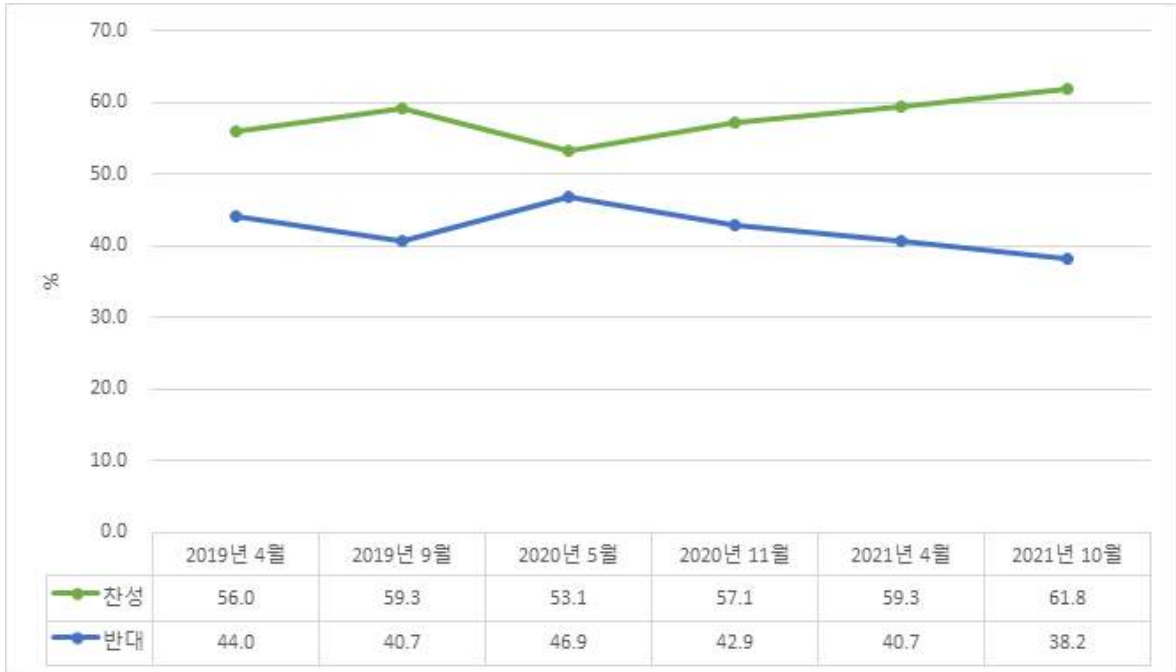
-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남한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절대 반대; 2=어느 정도 반대; 3=어느 정도 찬성; 4=매우 찬성
 - 1과 2를 합하여 "반대", 3과 4를 합해 "찬성"으로 코딩하여 위 그래프로 표시함.

■ 한국의 독자적 핵보유에 대한 긍정 의견이 꾸준히 증가

- 이 문항을 처음 조사한 2019년 4월 조사 이후,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의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21년 10월 조사에서는 71.3% 기록함.
- 유사한 문항을 조사하고 있는 아산연구원의 연구에서도 2020년 69.3%의 응답자가 독자 핵개발에 찬성함.¹⁾
-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과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임.

1) 제임스 김·강충구·함건희. 2021. "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 2010~2020년 아산연례조사 결과." 아산연구원, p. 37.

<그림 II - 9> 미국 핵 재배치에 대한 의견



■ 조사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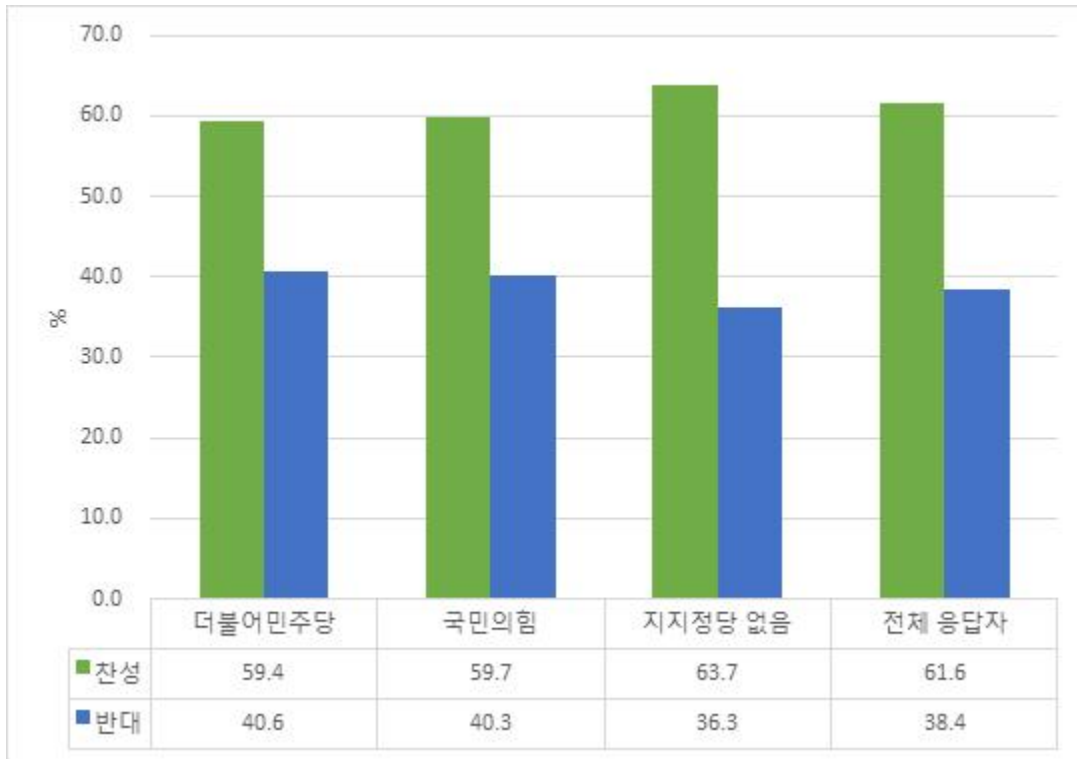
-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핵무기를 남한에 재배치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절대 반대; 2=어느 정도 반대; 3=어느 정도 찬성; 4=매우 찬성
 - 1과 2를 합산하여 “반대”, 3과 4를 합산하여 “찬성”으로 코딩하여 위 그래프에 표시함.

■ 과반수 이상이 미국 핵 재배치에 긍정적 의견

- 아산연구원의 2020년 조사에서 61.3%의 응답자가 미국 핵 재배치에 찬성함.²⁾
 -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에 대한 찬성의견이 미국 핵 재배치보다 10%p 정도 높다는 것도 유사함.
- 2019년 9월 조사 이후 미국 핵 재배치 찬성의견이 59.3%에서 53.1%로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함.
 - 이 시기는 한미 간의 방위비 부담금과 관련된 분쟁이 있었던 시기임. 이와 관련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만이 핵 재배치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2) 제임스 감·강충구·함건희. 2021. "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 2010~2020년 아산연례조사 결과." 아산연구원. p. 37.

<그림 II - 10> 통일 이후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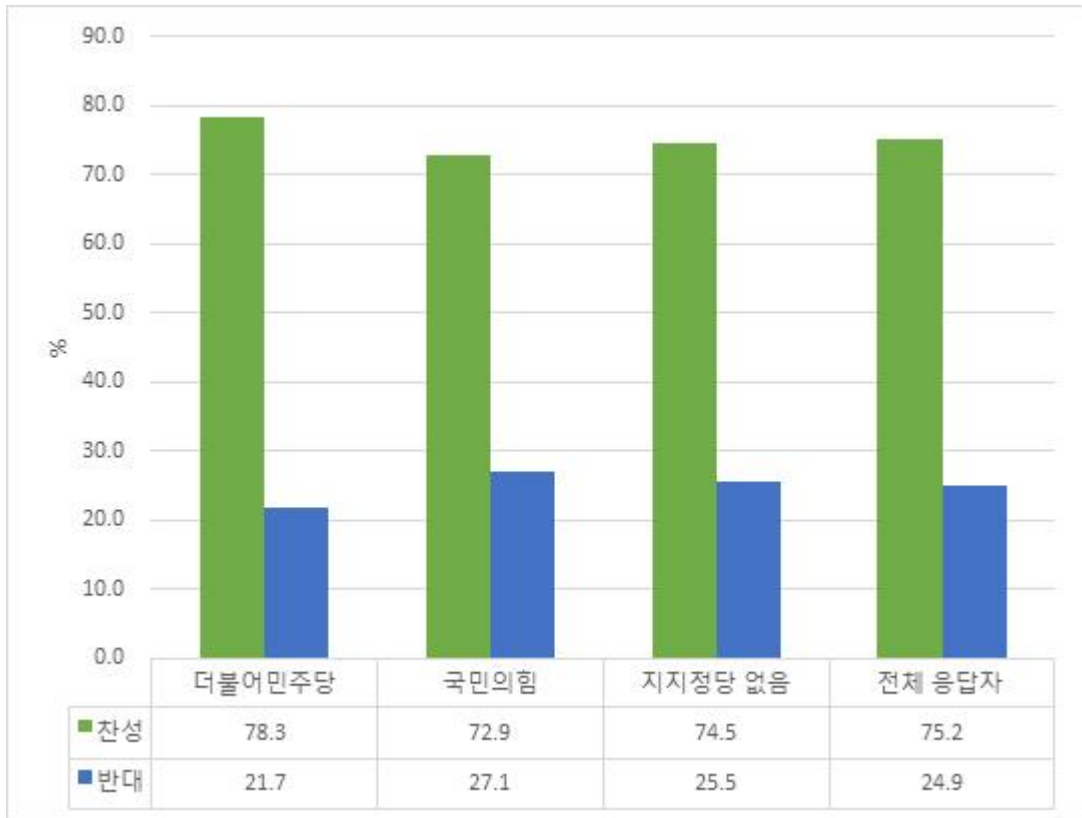
■ 조사 문항

- 귀하는 남북이 통일된 이후에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절대 반대; 2=어느 정도 반대; 3=어느 정도 찬성; 4=매우 찬성
 - 1과 2를 합산하여 "반대", 3과 4를 합산하여 "찬성"으로 코딩하여 위 그래프에 표시함.

■ 통일 이후 핵무기 보유에 대한 기대

- 전체 응답자의 61.6%가 통일 이후 핵무기 보유를 찬성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지정당에 따른 의견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 북한 핵으로부터의 안전 확보를 넘어,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주권과 생존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핵무기 보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그림 II - 11>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한 의견



■ 조사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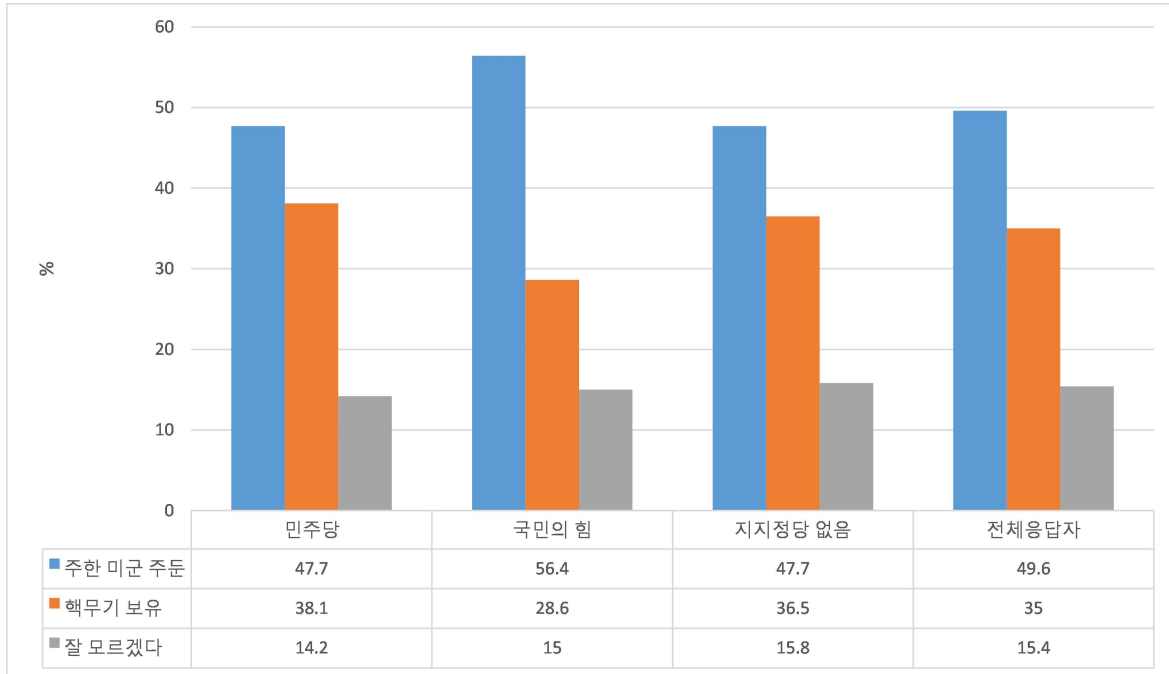
- 최근 미국은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고 개발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절대 반대; 2=어느 정도 반대; 3=어느 정도 찬성; 4=매우 찬성
 - 1과 2를 합산하여 "반대", 3과 4를 합산하여 "찬성"으로 코딩하여 위 그래프에 표시함.

■ 75% 이상의 응답자가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찬성

- 더불어민주당 찬성율이 78.3%로 국민의힘 72.9%보다 높았으나,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지지정당을 뛰어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
- 호주에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한다는 문항 내의 설명이 높은 찬성률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있음. 그러나 앞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높은 지지를 고려하면, 그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5. 주한미군 주둔 vs. 핵무기 보유

<그림 II - 12> 주한미군 주둔 vs. 핵무기 보유: 지지정당별 비교



■ 조사 문항

- “귀하는 우리의 국방을 위해 주한미군 주둔과 핵무기 보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1=주한 미군 주둔; 2=핵무기 보유;3= 잘 모르겠다.

■ 핵보유 보다 동맹을 통한 안보를 선호

- 전체 응답자의 49.6%가 주한미군 주둔을 선택함. 하지만 ‘핵무기 보유’라고 응답한 비율도 약 35%로, 3분의 1 이상의 국민이 핵무기 보유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남한의 독자적 핵개발 혹은 미국 핵 재배치에 대해 물었을 때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들이 핵보유 필요성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과 대조적인 결과
- 한국 국민들이 핵개발 혹은 미국 핵 재배치에 따르는 부담과 위험성에 대해 결코 무지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결과임. 한국인들은 가능하다면 핵보유 없이 동맹을 통한 안보를 선호함.
- 지지정당별 비교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와 무당파가 핵무기 보유를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전통적으로 보수정당 지지자가 안보와 관련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핵무기 보유'라고 응답한 비율도 약 35%로, 3분의 1 이상의 국민이 핵무기 보유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지지정당별 비교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와 무당파가 핵무기 보유를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전통적으로 보수정당 지지자가 안보와 관련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ecutive Summary

K I N U
통일의식
조사
2 0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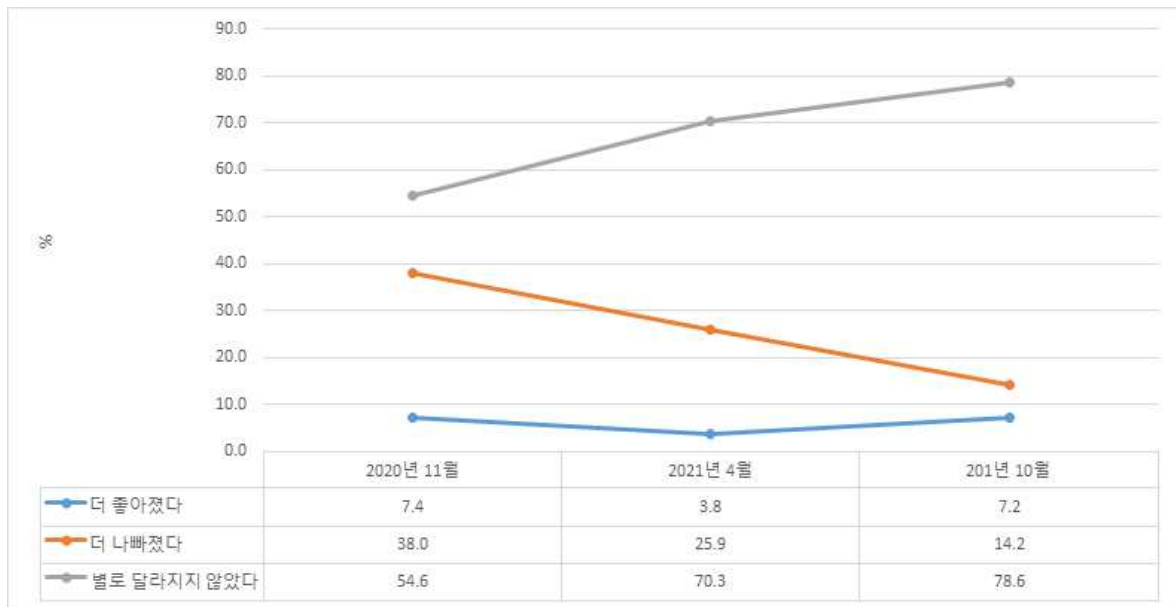
III

한미관계 현안과 미국인식

III. 한미관계 현안과 미국인식

1. 한미관계 평가

<그림 III - 1> 한미관계 평가



■ 조사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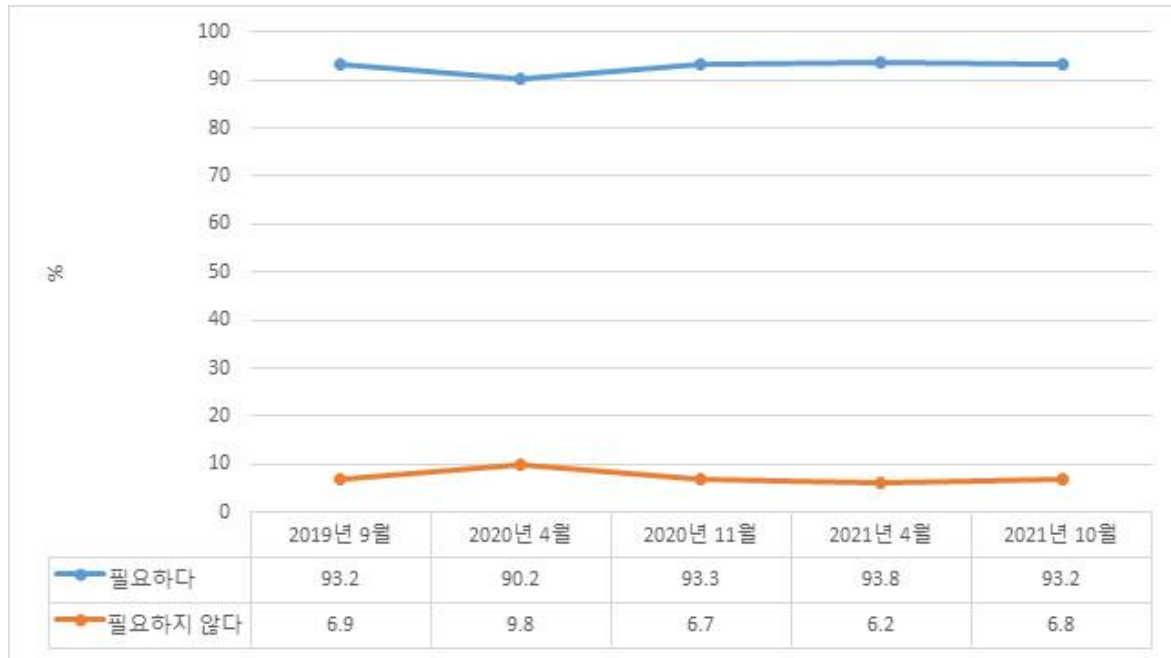
- “지난 1년 동안 한미관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1=더 좋아졌다; 2=더 나빠졌다; 3=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 한미관계 부정적 평가의 감소

- 지난해 11월부터 3번에 걸쳐 조사된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자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79%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함.
-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정상외교로 복귀하고, 우리와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해결하면서 한미관계의 부정적 평가를 감소시킨 것으로 보임.

2. 한미동맹의 필요성

<그림 III - 2> 한미동맹의 필요성



■ 조사 문항

- “귀하는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필요하지 않다; 2=별로 필요하지 않다; 3=약간 필요하다; 4=매우 필요하다
 - 1과 2를 합산하여 “필요하지 않다”, 3과 4를 합산하여 “필요하다”로 코딩함.

■ 한미동맹 필요성에 대한 전국민적인 공감대 재확인

- 이번 조사에서도 이전 조사와 비슷한 수준인 93%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 국민의 지지는 매우 확고하고 안정적임을 보여 줌.
- 국민의 힘 지지자가 다소 높은 비율로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지지정당에 따른 큰 인식 차이는 없음(<표 III - 1>).

<표 III - 1> 한미동맹 필요성: 지지정당별 (%)

	2019년 9월	2020년 4월	2020년 11월	2021년 4월	2021년 10월
더불어민주당	93.5	88.9	93.6	90	93.9
국민의힘	92.3	92.3	95.2	96.4	96.4
무당파	92.7	91.1	93	95.2	91.1

3.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 현재와 통일 이후

<그림 III - 3>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 현재와 통일 이후



■ 조사 문항

- 현재 미군주둔 필요: “귀하께서는 주한미군이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통일 후 미군주둔 필요: “귀하께서는 주한미군이 통일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필요하지 않다; 2=별로 필요하지 않다; 3=약간 필요하다; 4=매우 필요하다
 - 3과 4를 합산하여 “필요하다”로 코딩한 후 위의 그래프에 표시함.

■ 통일 이후 주한미군 필요성 증가

- 이번 조사에서도 주한미군의 현재 한반도 주둔 필요성에 대해서 약 90%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통일 이후 미군 주둔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약 61%로 나타남.
- 통일 이후 미군 주둔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이 지난 4월 조사에서보다 약 10%p 증가함.
 - 지난 9월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가 초래하는 혼란을 목격한 것이 한 원인일 수 있음. 더불어 최근의 미중경쟁 격화는 한미동맹과 그 핵심 요소인 미군 주둔이 북한 위험 요소가 감소하더라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즉,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지역안보 차원에서 바라보는 인식이 증가함. 미군 주둔 문제를 민족주의나 자주국방의 시각보다 실리주의적 시각에서 인식해 가고 있음을 시사함.

4.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개선

<그림 III - 4>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개선



■ 조사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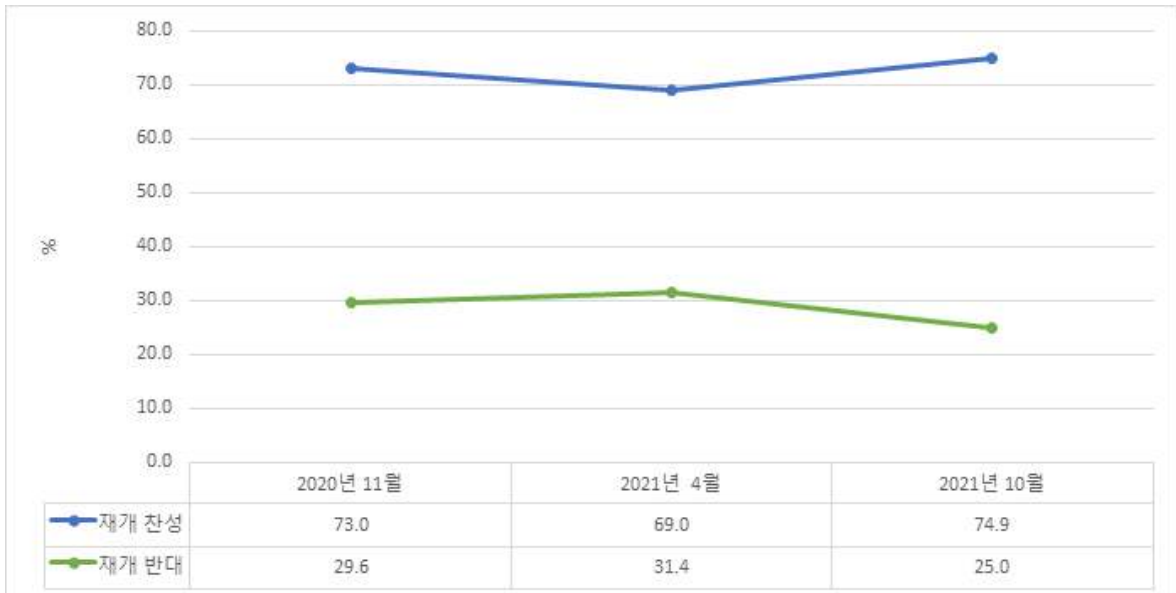
- “남북관계 보다 한미동맹 강화가 더 중요하다”
 - 1=매우 찬성; 2=다소 찬성; 3=다소 반대; 4=매우 반대
 - 1과 2를 합산하여 “한미동맹 중요”, 3과 4를 합산하여 “남북관계 중요”로 코딩하고 위 그래프에 표기하였음.

■ 한미동맹 강화가 남북관계 개선보다 더 중요

- 67.0%의 응답자가 한미동맹 강화가 남북관계 개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 7년 전 조사(51.9%)에 비해 약 15%p 증가함.
- 우리 국민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한미협력이 제공하는 경제·정치·군사적 안정감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남북관계가 대화와 교착을 반복하면서 국민 다수가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를 품지 않는 것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임.

5. 북미정상회담 재개

<그림 III - 5> 북미정상회담 재개



■ 조사 문항

- “귀하께서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조건없이 재개; 2=비핵화 진전 보이면 재개; 3=북핵 완전 포기전 재개 반대; 4=어떤 상황에서도 재개 반대
 - 1과 2를 합산하여 “재개 찬성”, 3과 4를 합산하여 “재개 반대”로 코딩하여 위 그래프에 표기하였음.

■ 북미정상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 증가

- 이번 조사에서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조건 없이 재개’, ‘북한이 비핵화 진전을 보이면 재개’) 긍정적 응답이 지난 조사보다 약 5%p 증가한 74.9%로 나타남.
 - 반면 지난 4월 조사에 비해 재개에 반대하는 비율은 약 6%p 감소함.
- 그러나 긍정적 응답자의 75%(전체 응답자의 약 56%)가 북한이 비핵화 진전을 보인다는 조건

하에서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찬성한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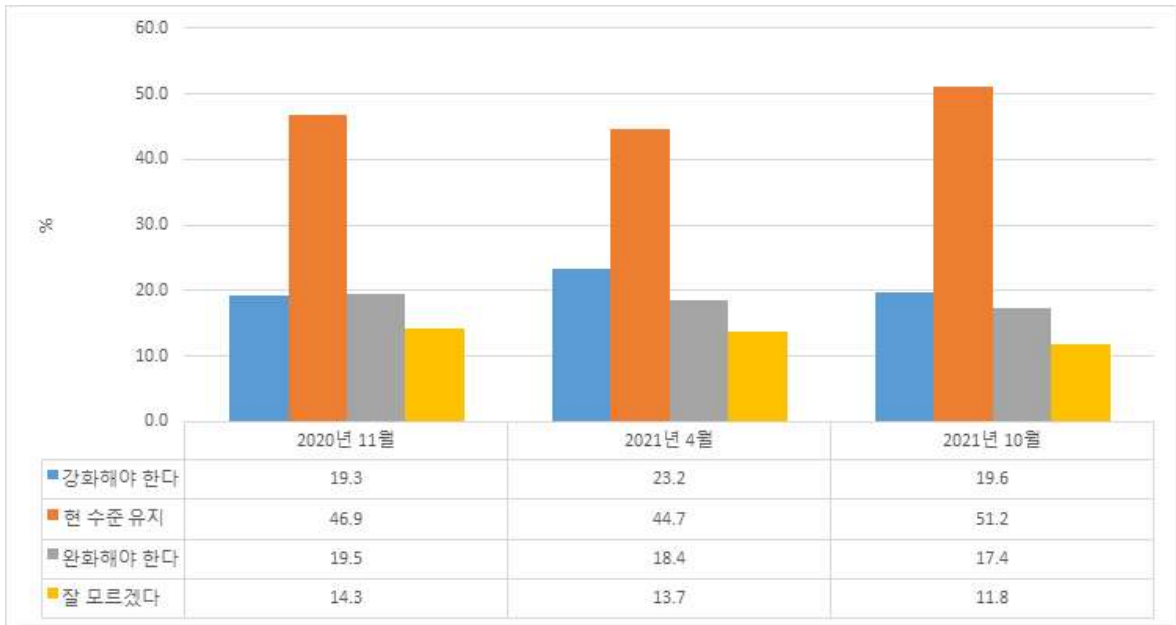
- 지지정당별로 살펴보면 지난 조사에 비해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긍정적인 국민의힘 지지자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함(<표 III - 2>).
 - 구체적으로 약 20%p 늘어난 72%가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긍정적 태도를 보임.
 -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의 95%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것을 감안하면 이는 의미 있는 변화임.
 -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의미 있다고 보는 국민의힘 지지자가 늘어난 것임.

<표 III - 2> 북미정상회담 재개 찬성: 지지정당별 비교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무당파
2020년 11월	79.6	65.6	70.2
2021년 4월	81.2	52.7	66.8
2021년 10월	80.1	72.2	73.8

6.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그림 III - 6>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 조사 문항

- “귀하께서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강화; 2=현수준 유지; 3=완화; 4=잘 모름

■ 현 수준의 대북 경제제재 유지를 선호

- 이번 조사에서도 지난 4월 조사와 마찬가지로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현 수준의 미국의 대북 제재가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데 일정 정도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 가능함.
- 우리 국민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제재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준의 북핵 도발이 없는 것에 가중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Executive Summary

K I N U
통일의식
조사
2 0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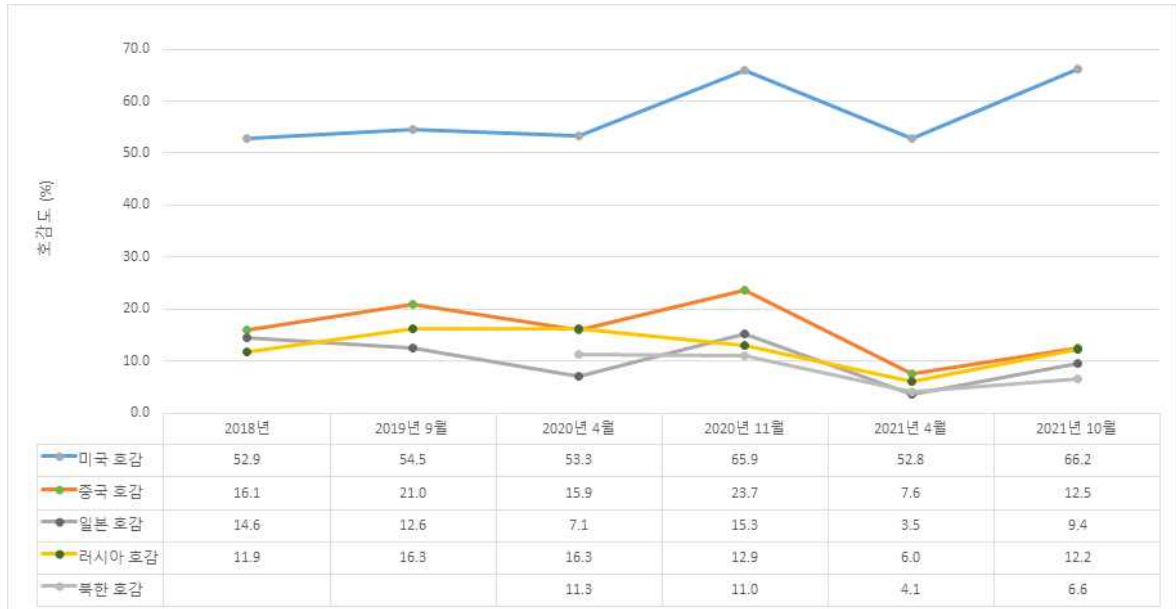
IV

주변국 인식과 미중관계에 대한 평가

IV. 주변국 인식과 미증관계에 대한 평가

1. 주변국 호감도

<그림 IV - 1> 주변국 호감도 2018~2021년



■ 조사 문항

- “귀하께서는 _____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혹은 얼마나 싫어하는지 -5점에서 5점 사이의 점수를 매겨주십시오. -5점은 매우 싫어하는 것을, 5점은 매우 많이 좋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보통’인 0을 기준으로 음수(-5~-1)는 비호감, 양수(1~5)는 호감으로 코딩함. 위 그래프에는 각 나라에 대한 호감을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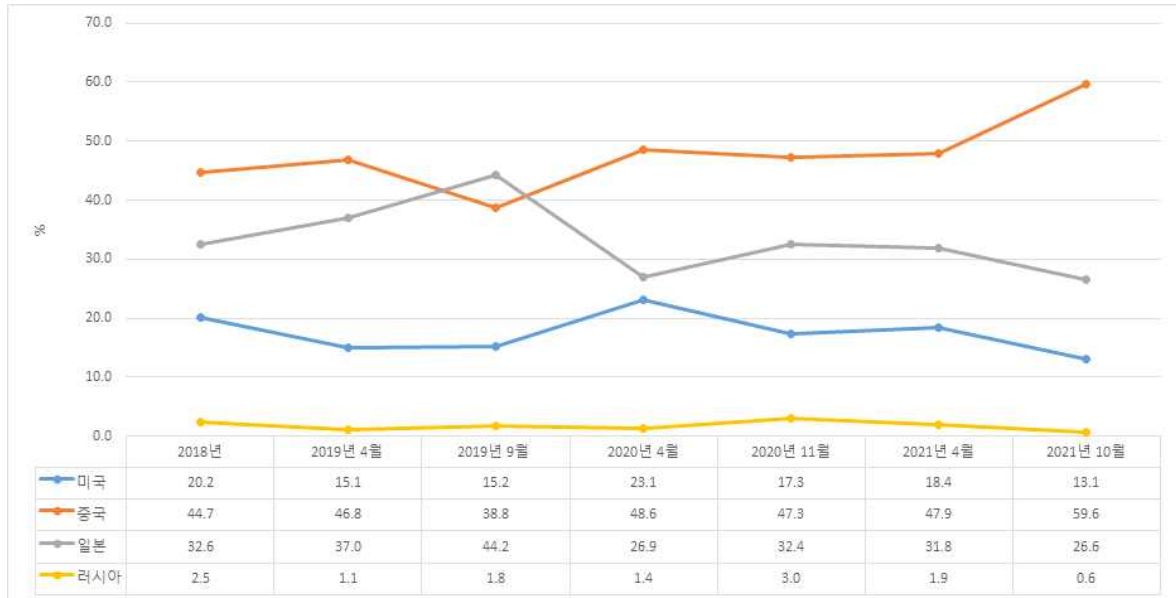
■ 미국에 대한 높은 호감도

- 주변국 중 동맹국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음. 미국은 유일하게 호감을 표한 응답자가 과반이 되는 나라이며, 올해 2차 조사에서는 작년 2차 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응답자 66.2%가 미국에 호감을 나타내고 있음.
- 반면에 북한과 정치, 군사적으로 우호적인 중국(12.5%)과 러시아(12.2%)에 대한 호감은 비슷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남.

-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일본 또한 북한과 유사한 수준에서 호감도가 낮게 나타남.
- 북한에 대한 낮은 호감은 북미 협상 결렬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남북, 북미관계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일본의 경우는 전통적인 대일 국민감정과 일본의 대한 무역보복 국면이 나아지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2. 통일을 가장 바라지 않는 나라

<그림 IV - 2> 통일을 가장 바라지 않는 나라 2018~2021년



■ 조사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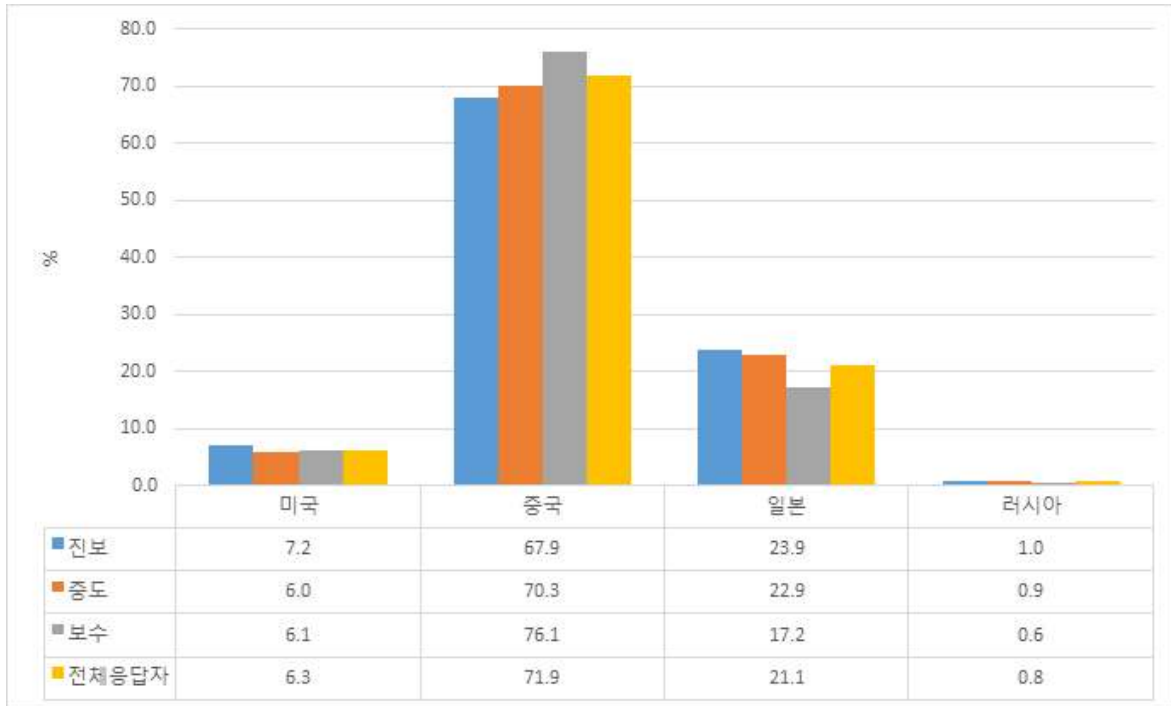
-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느 나라가 남북한 통일을 가장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1=미국; 2=중국; 3=일본; 4=러시아

■ 가장 통일을 원하지 않는 나라는 중국

- 일본의 무역보복이 시작된 2019년 조사에서 일본이 꼽힌 것을 제외하고, 북한과 우호 관계에 있는 중국이 매 조사에서 통일을 가장 바라지 않는 나라로 평가됐음.
 - 이번 조사에서는 2018년 조사 시작 이래 처음으로 절반을 훌쩍 넘는 59.6%의 응답자가 중국을 통일에 부정적인 나라로 꼽음.
- 중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한국전쟁 이래로 북한을 지원해 온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아울러, 최근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격화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이 같은 해석은 올해 조사에서 71.9%에 달하는 대다수 응답자가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주변국으로 중국을 지정한 것에 의해서도 뒷받침됨(<그림 IV - 3>).

3. 가장 위협적인 주변국가

<그림 IV - 3> 가장 위협적인 주변국가: 이념별 비교



■ 조사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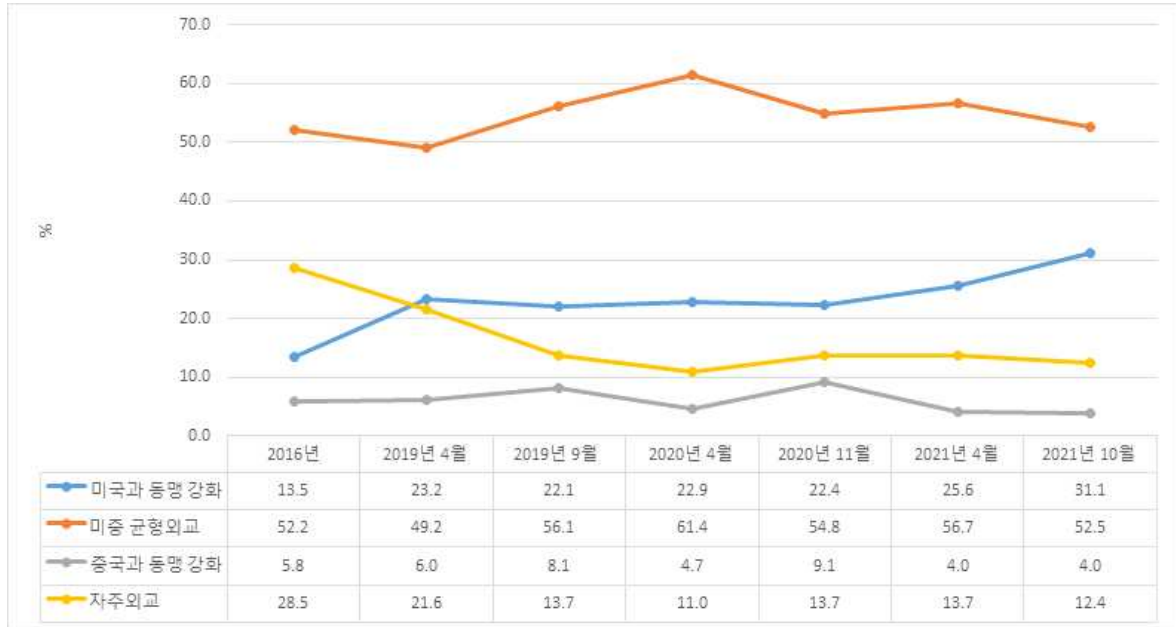
- 다음의 주변국 가운데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미국; 2=중국; 3=일본; 4=러시아

■ 북한을 제외한 주변국 중에서는 중국이 가장 안보에 큰 위협

- 주변 4개국 중에 한국의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로 압도적인 다수가 중국을 선택(71.8%)함.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는 북한을 포함하여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국가를 선택하는 문항을 조사함.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중국이 46%, 북한이 37.9%, 일본 11.3%, 미국 3.9%, 러시아 0.9% 였음.
- 중국의 전랑외교 등 강압적이고 주변국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홍콩 민주화 운동 탄압 및 대만에 대한 압력 등이 중국을 위협적으로 느끼게 하고 있음.
- 이념별로 비교했을 때, 진보는 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본을 위협으로 꼽는 비율이 약간 높았음. 그러나 진보 역시 3분의 2가 중국을 가장 큰 안보위협국으로 지목하였음.

4. 대미·대중 외교 정책 방향

<그림 IV - 4> 대미·대중 외교 정책 방향 2018~2021년



■ 조사 문항

- “향후 한국은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중국보다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미국과 동맹 강화); 2=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외교를 한다(미중 균형외교); 3=미국보다는 중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한다(중국과 동맹 강화); 4=미국과 중국과 관계없이 자주 외교를 해야 한다” (자주외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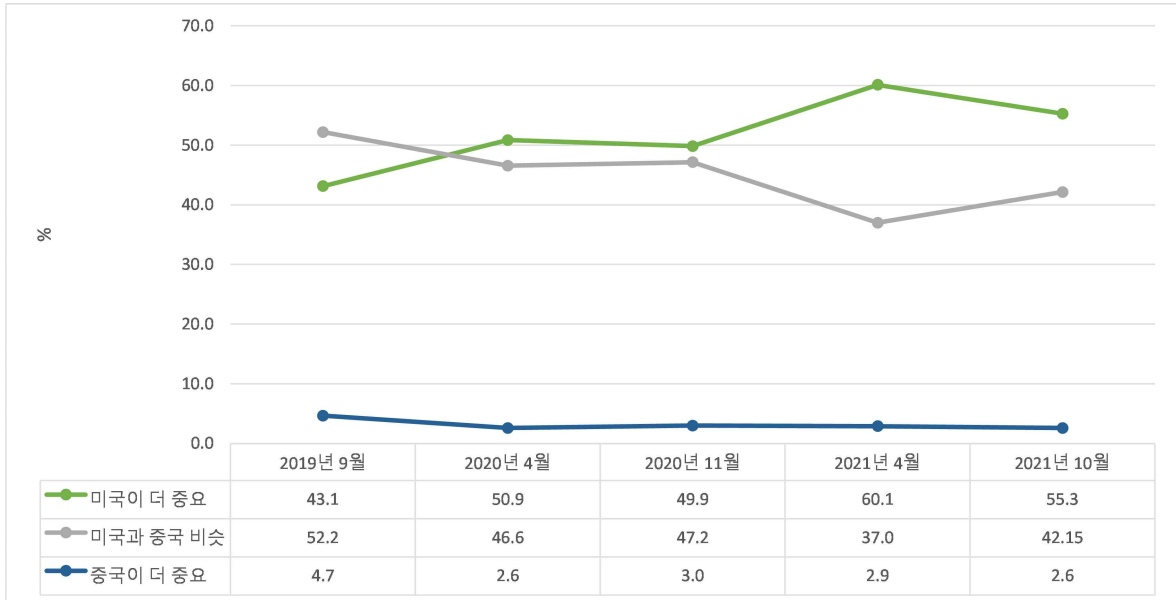
■ 한미동맹 강화 의견이 증가 추세

- 2016년 첫 조사 이래로 49.2%를 기록한 2019년 4월 조사를 제외하고는 향후 미중 균형외교를 선호하는 응답자 비율이 과반을 유지하고 있음.
 - 그 다음 외교 정책 방향 선호는 미국과 동맹 강화로서 이는 2019년 4월 조사 이래로 지속해서 두 번째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음.
- 특히 미국과 동맹 강화를 찬성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1년 10월 조사에서는 31.1%에 달함.

- 중국과 동맹 강화를 찬성하는 비율은 10% 미만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올해 두 차례 조사에서 모두 4.0%로 더 낮게 나타났음.
 - 2021년 10월 조사에서 미국과 동맹 강화를 선호하는 비율은 중국과 동맹 강화 찬성보다 8배 높음.
- 한국 국민들은 미중 균형외교를 가장 선호함. 그러나 한미동맹을 한중동맹보다 훨씬 더 선호하는 것은 두 강대국의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과 국제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적절한 선호 분포로 평가할 수 있음.
 - 2019년 9월 조사 이래로 자주외교에 대한 선호가 10%대 초반으로 비교적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함.

5. 한국의 안보와 미중

<그림 IV - 5> 한국 안보: 미중 상대적 중요도 2018~2021년



■ 조사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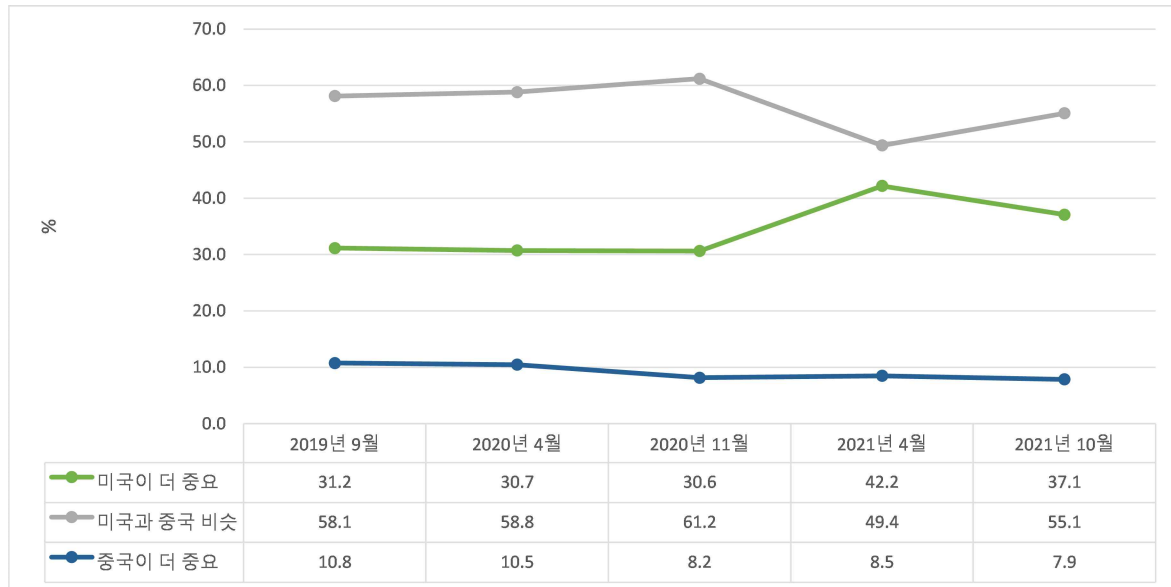
- “한국의 안보를 위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중요; 2= 미국이 중국보다 다소 중요; 3=미국과 중국이 비슷한 정도로 중요; 4=중국이 미국보다 다소 중요; 5=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중요
 - 1과 2를 합산하여 “미국이 중요”, 4와 5를 합산하여 “중국이 중요”로 코딩하여 위 그래프에 표기하였음.

■ 한국 안보와 미국의 상대적 중요성

- 2019년 첫 조사를 제외하면, 2020년 1차 조사 이래로 한국의 안보를 위해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더 중요 또는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반수를 넘음. 그 다음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비슷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0% 내외를 차지하고 있음.
- 2021년 4월과 10월 조사 결과는 바이든 정부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2020년 이전 조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등으로 안보 측면에서 미국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은 평가가 있었을 가능성이 큼.

6. 한국의 경제와 미중

<그림 IV - 6> 한국 경제: 미중 상대적 중요도 2018~2021년



■ 조사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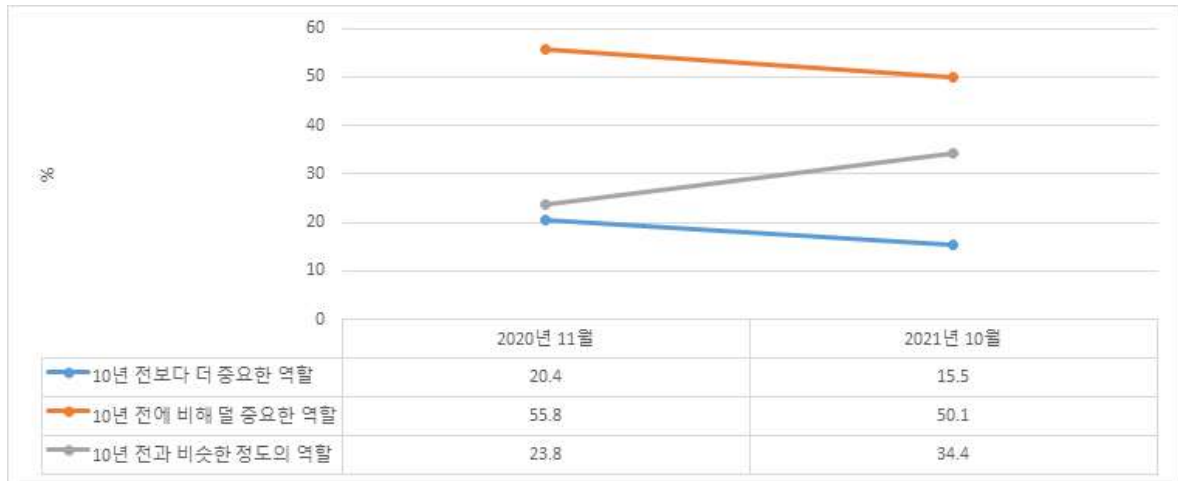
- “한국의 경제를 위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미국이 훨씬 중요; 2= 미국이 다소 중요; 3=미국과 중국이 비슷한 정도로 중요; 4=중국이 다소 중요; 5=중국이 훨씬 중요
 - 1과 2를 합산하여 “미국이 중요”, 4와 5를 합산하여 “중국이 중요”로 코딩하여 위 그래프에 표기하였음.

■ 한국의 경제를 위해서도 미국이 중국보다 더 중요

- 미국이 경제 차원에서도 중요 또는 훨씬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중국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보다 약 30%p 이상 높음.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이와 같은 긍정 비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 예컨대, 올해 2차 조사의 경우, 미국이 한국 경제에 훨씬 중요(16.9%) 또는 중요(20.2%) 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7.1%로 30% 내외를 기록한 2020년 조사보다 약 7%p 높게 나타났다.

7. 미국의 리더십 중요성 변화

<그림 IV - 7> 미국의 리더십 중요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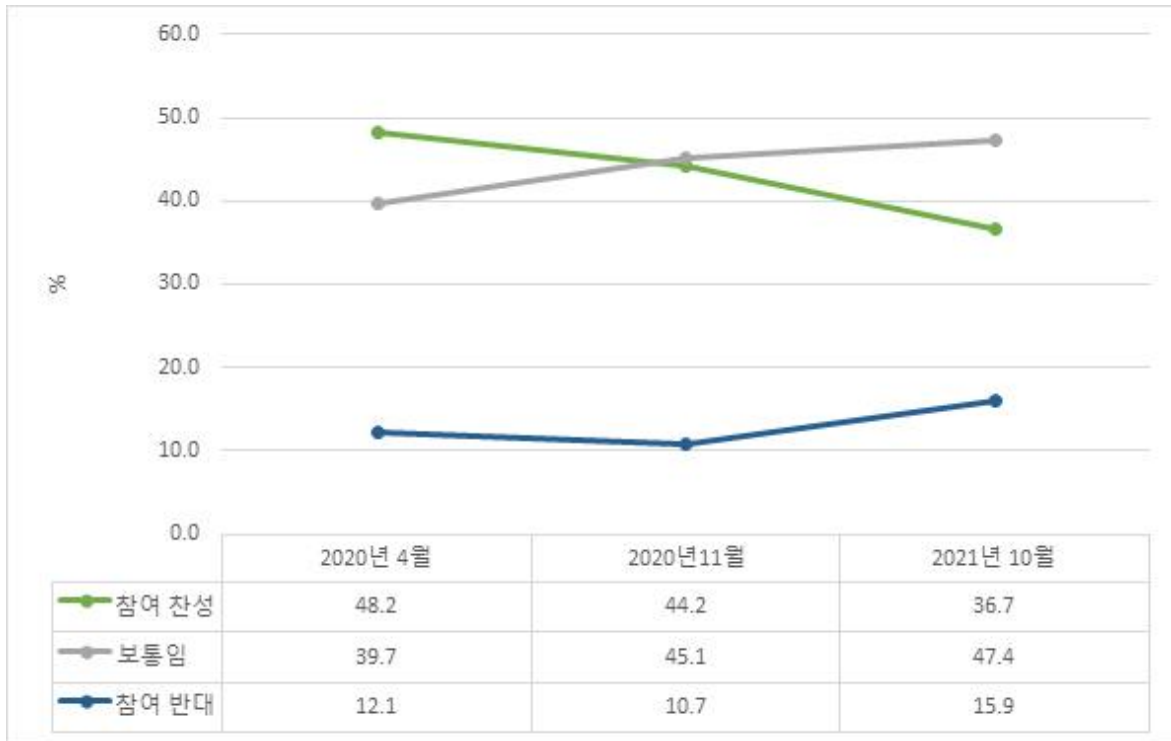
■ 조사 문항

- “귀하는 10년 전과 비교해 오늘날 세계 리더로서 미국이 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10년 전보다 더 중요한 역할; 2=10년 전에 비해 덜 중요한 역할; 3=10년 전과 비슷한 정도의 역할

■ 미국의 세계 리더십에 대한 실망감 증가

- 우리 국민 과반인 50%가 지난 10년 전에 비해 세계 리더로서 미국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1년 전 조사에 비해 약 6%p 감소함. 세계 리더로서 미국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보는 비율도 작년 조사보다 5%p 줄어든 약 16%로 조사됨.
- 미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러한 판단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참여에 대한 인식에도 전이된 것으로 나타남(<그림 IV - 8>).

<그림 IV - 8>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참여



■ 조사 문항

- “한국은 한반도 주변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문제에서도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 1=전혀 동의하지 않음; 2= 별로 동의하지 않음; 3=보통임; 4=다소 동의함; 5=매우 동의함.
 - 1과 2를 합산하여 “참여 반대”, 4와 5를 합산하여 “참여 찬성”으로 코딩하고 위 그래프에 표기하였음.

■ 미국의 세계질서 유지 동참에 대한 동의 감소

- 3번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부정적 태도(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및 유보적 태도가 증가함. 반면 동의하는 비율은 감소함.
- 3번의 조사 모두에서 비교적 젊은 코호트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유지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부정적 태도의 증가는 전 세대에 걸쳐 고르게 발견됨.
 -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가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더 이상 당연하거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함.

8. 국제사회 리더로서의 미국

<그림 IV - 9>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 역할 평가 2019~2021년



■ 조사문항

- “귀하는 현재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 1=전혀 잘하고 있지 않다; 2= 별로 잘하고 있지 않다; 3=잘하고 있다; 4=매우 잘하고 있다
 - 1과 2를 합산하여 “못함”, 3과 4를 합산하여 “잘함”으로 코딩하고 위 그래프에 표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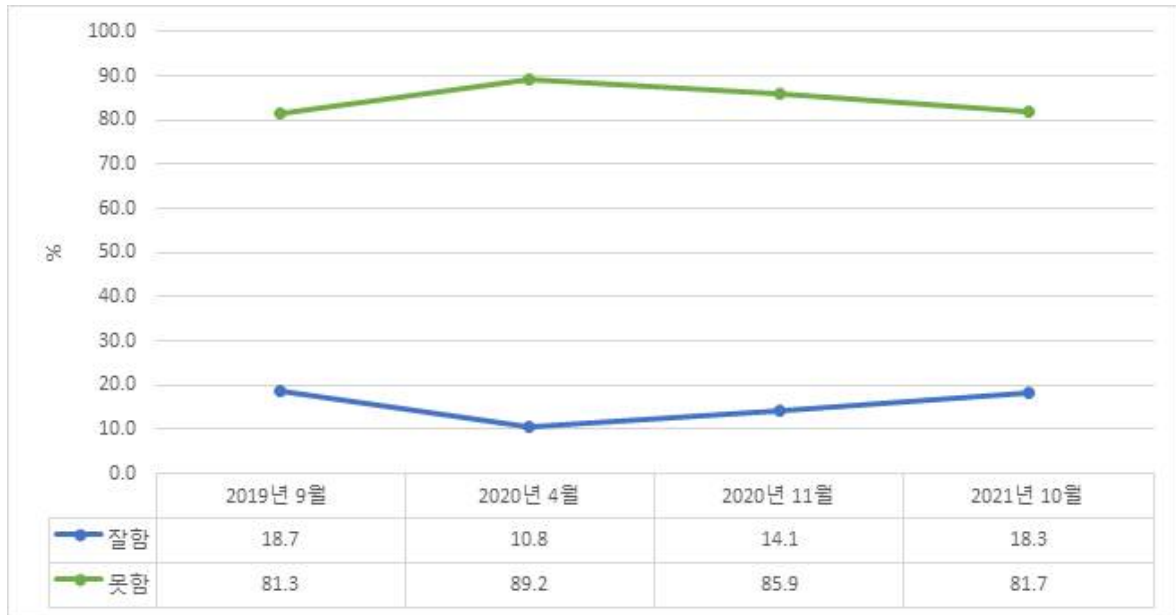
■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긍정 평가 증가

- 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 2021년 10월 조사에서 잘함(42.2%) 또는 매우 잘함(2.0%)으로 평가한 비율이 44.1%로 이전 조사 결과보다 최대 25.9%p(2020년 4월 18.3%) 상승했음.
- 이는 바이든 정부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되며, 대선 이후 1주년 지난 시점에서도 이와 같은 긍정적 기대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미국이 국제사회 리더 역할을 매우 잘하고 있다는 적극적 긍정 평가 비율이 여전히 낮은 것은 동맹국에 대한 긍정 평가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가능성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함.

9. 국제사회 리더로서의 중국

<그림 IV - 10> 중국: 국제사회 리더 역할 2019~2021년



■ 조사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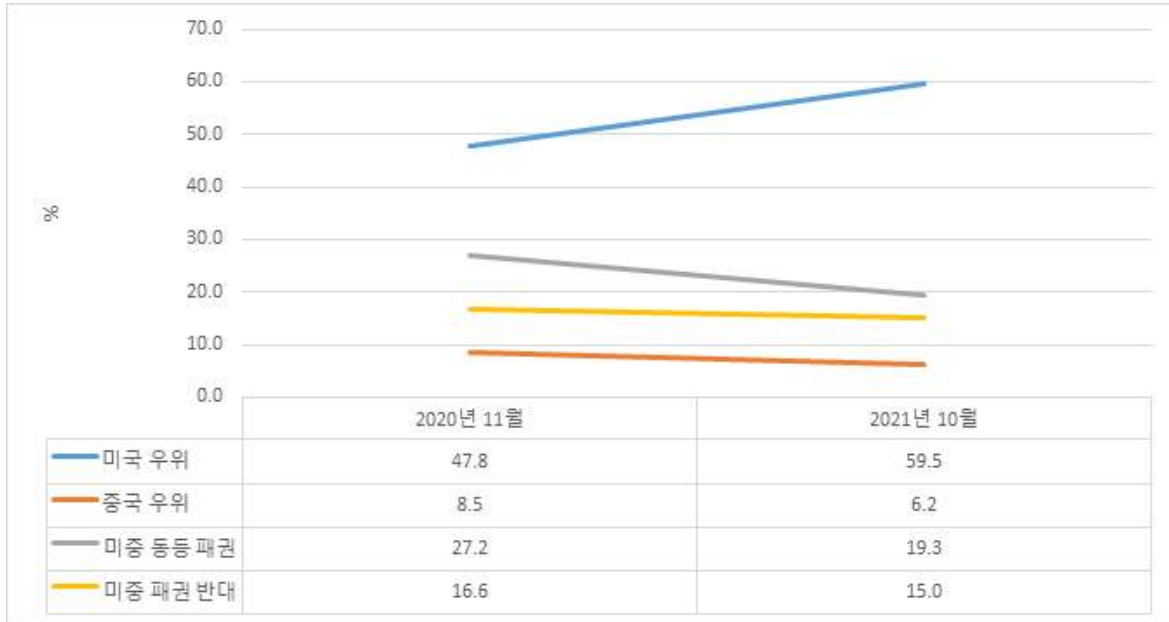
- “귀하는 현재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 1=전혀 잘하고 있지 않다; 2= 별로 잘하고 있지 않다; 3=잘하고 있다; 4=매우 잘하고 있다.
 - 1과 2를 합산하여 “못함”, 3과 4를 합산하여 “잘함”으로 코딩하고 위 그래프에 표기하였음.

■ 중국 리더십에 대한 부정적 평가

- 중국의 리더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유지되고 있음.
- 특히,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매우 못하고 있다는 적극적 부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2021년 10월 조사에서는 적극적 부정 평가가 27.4%로 미국(4.8%)보다 약 5.7배 높게 나타났음.
- 같은 맥락에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역시 미국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음. 또한, 중국이 리더십 역할을 매우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매번 조사에서 1, 2명에 그치고 있음.

10.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그림 IV - 11> 미중 패권 선호 2020~2021년



■ 조사문항

- “미중이 경제와 안보에서 패권을 두고 전방위적인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미중 경쟁에서 어느 국가가 우위에 있기를 바라십니까?”
 - 1=미국이 우위에 있기를 바란다; 2=중국이 우위에 있기를 바란다; 3=두 국가가 동등한 패권 지위를 갖기를 바란다; 4=미중 모두 세계 패권인 것이 싫다

■ 미국 우위의 국제질서에 대한 압도적 선호

- 작년 조사와 1년 후 실시된 올해 조사 모두 미국 우위의 국제질서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남.
 - 미국 우위를 선호하는 비율은 47.8%에서 59.5%로 11.7%p 상승한 데 비해, 중국 우위를 선호하는 비율은 10%가 채 되지 않으면서도 8.5%에서 6.2%로 2.3%p 하락했음.
- 2021년 10월 조사에서는 미중의 동등한 패권을 선호하는 비율(19.3%)과 어느 한 나라의 패권도 반대하는 비율(15.0%)은 미국 우위를 선호하는 비율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음.
- 요약하면, 일관되게 응답자들은 다른 주변 강국에 비해 호감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동맹국 미국

우위의 국제질서를 선호하며,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 중국보다 미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국제 사회 리더로서 미국의 역할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Executive Summary

K I N U
통일의식
조사
2 0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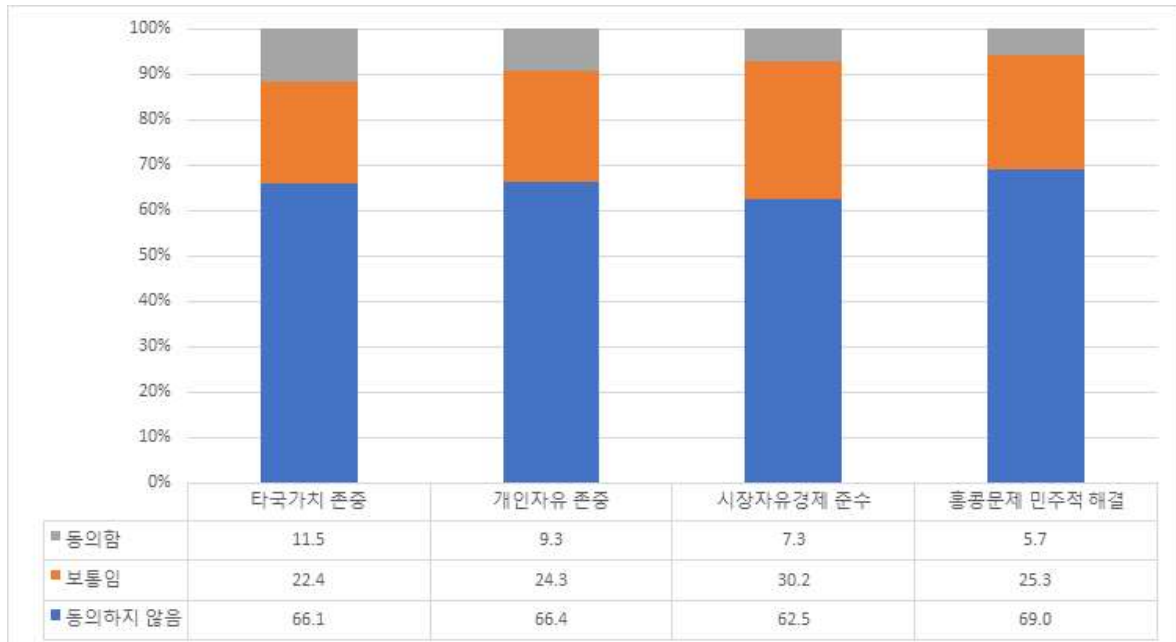
V

한중관계와 중국인식

V. 한중관계와 중국인식

1. 중국인식: 민주적 가치

<그림 V - 1> 중국인식: 민주적 가치 존중



■ 조사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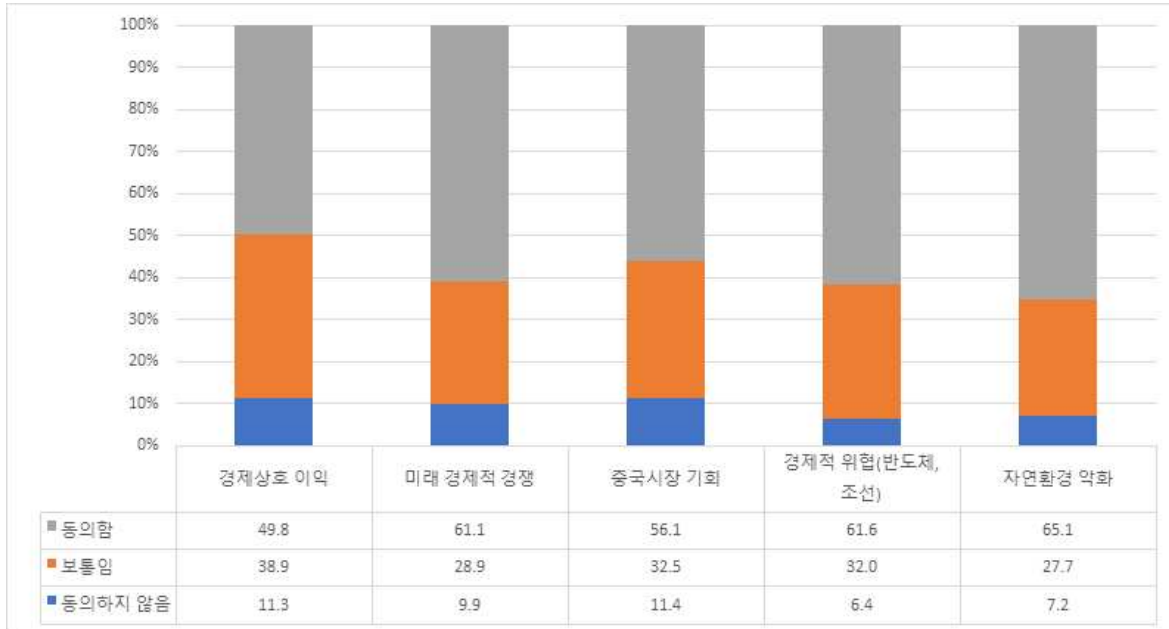
- “중국은 다른 나라의 문화와 정치를 존중한다”; “중국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 “중국은 자유 시장경제 원칙을 지킨다”; “중국은 홍콩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 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별로 동의하지 않음; 3=보통임; 4=약간 동의함; 5=매우 동의함.
 - 각 문항에 대한 긍정 응답(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을 “동의함”, 부정 응답(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을 “동의하지 않음”으로 코딩하여 위 그래프에 표기하였음.

■ 중국의 민주적 가치 준수에 대한 극도의 부정적 인식

- 중국이 민주적 가치를 잘 준수한다고 동의하는 비율은 10% 내외에 그침. 특히, 중국이 홍콩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비율은 70%에 달함.
 - 이는 한국 내에서 민주적 가치가 강조될수록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2. 중국인식: 경제적 이익

<그림 V - 2> 중국인식: 경제적 이익 상충



■ 조사 문항

-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한국과 중국은 미래에 경제적으로 경쟁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가진 큰 시장은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이 현재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가지는 부문(반도체, 조선 등)에서 중국은 위협이 될 것이다”; “중국은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주변국의 자연환경이 나빠지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 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별로 동의하지 않음; 3=보통임; 4=약간 동의함; 5=매우 동의함.
- 각 문항에 대한 긍정 응답(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을 “동의함”, 부정 응답(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을 “동의하지 않음”으로 코딩하여 위 그래프에 표기하였음.

■ 경제 파트너로서의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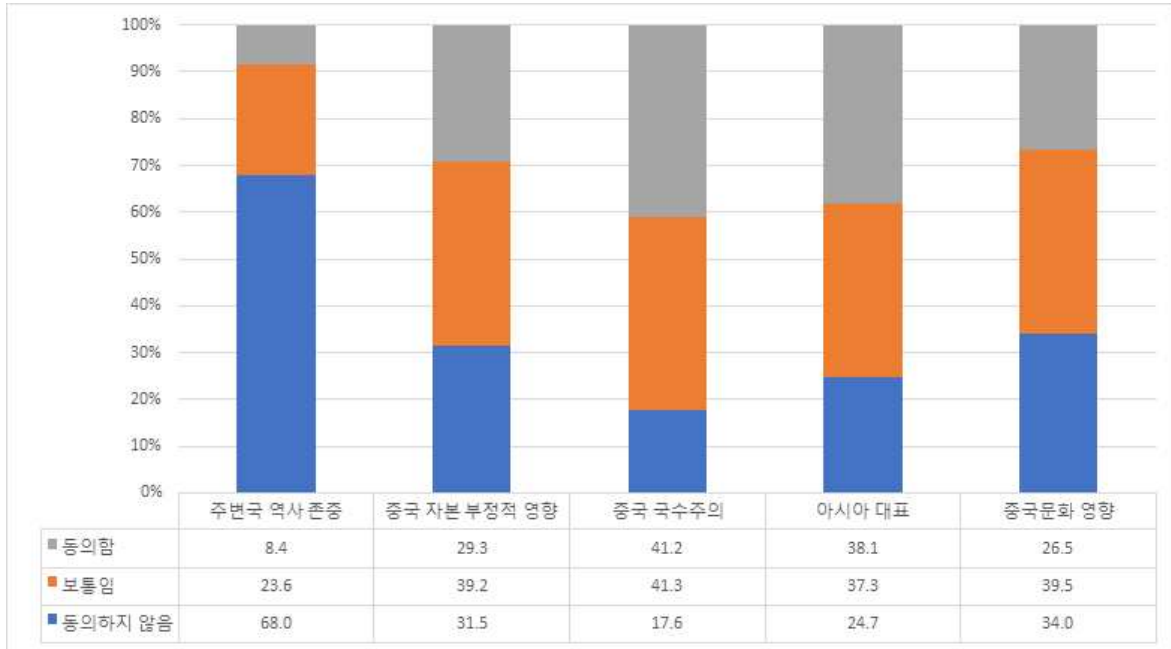
- 한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비율이 절반 정도이고, 중국의 거대 시장에 대한 긍정 평가도 56.1%에 이른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부정적 인식이 혼재하고 있음.
- 자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주변국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비율 역시 65.1%에 이른다. 이는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기반 약화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중국발(中國發) 미세먼지

논란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미세먼지 원인을 양국의 객관적·과학적 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 합의된 해결책을 끌어내지 못할 경우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 높음.

3. 중국인식: 역사 및 문화

<그림 V - 3> 중국인식: 역사 및 문화



■ 조사 문항

- “중국은 주변국의 역사를 존중한다”; “중국 자본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의 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의 젊은이들은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다”; “중국은 아시아를 대표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 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별로 동의하지 않음; 3=보통임; 4=약간 동의함; 5=매우 동의함.
 - 각 문항에 대한 긍정 응답(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을 “동의함”, 부정 응답(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을 “동의하지 않음”으로 코딩하여 위 그래프에 표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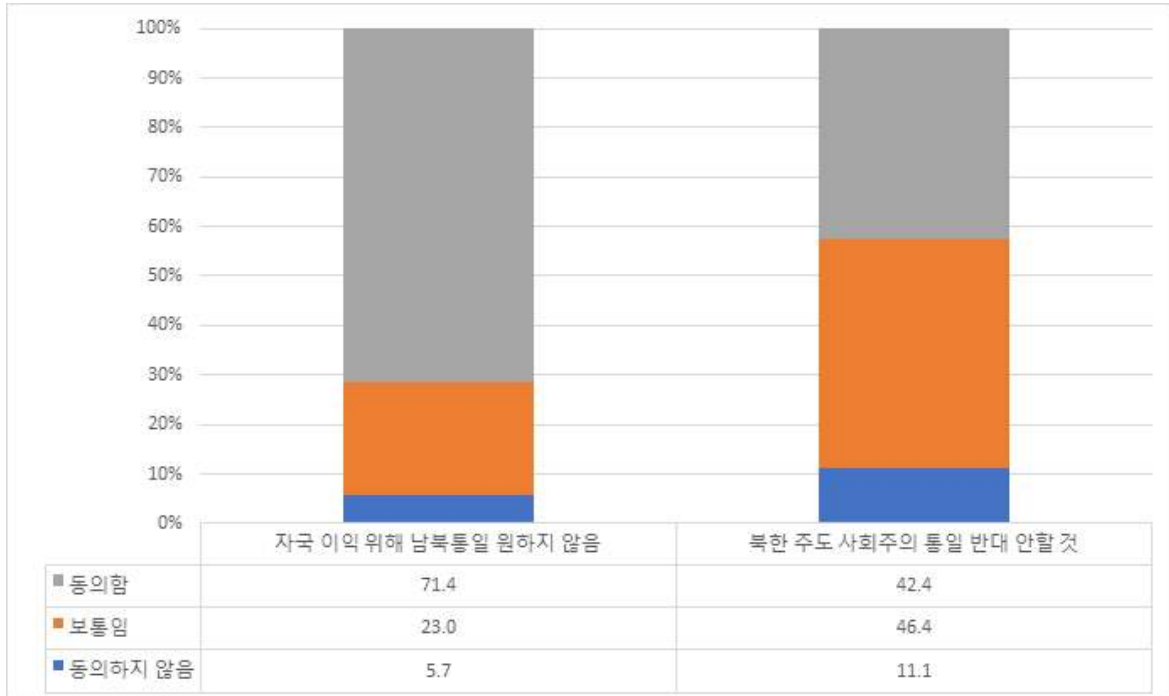
■ 중국인식의 다층적 측면

- 응답자의 2/3 이상이 중국이 주변국 역사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답변함.
- 반면, 중국 자본을 통해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에 대한 의견은 팽팽하게 갈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우리 문화 수준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일 수 있음.
- 중국 청년층의 강한 국수주의적 경향에 대해 우려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비율보다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미래 한중관계에 대한 부정적 전망과 연결될 수 있음.

- 그러나 부정적 인식과는 별개로 중국을 아시아의 대표로 보는 비율이 38.1%에 이르고,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는 비율 역시 26.5%를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로부터 중국에 대한 혼재된 평가나 중국 관련 쟁점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태도 이면에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역사 및 문화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음.
- 즉, 한국인의 중국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4. 중국과 한반도 통일

<그림 V - 4> 중국과 한반도 통일



■ 조사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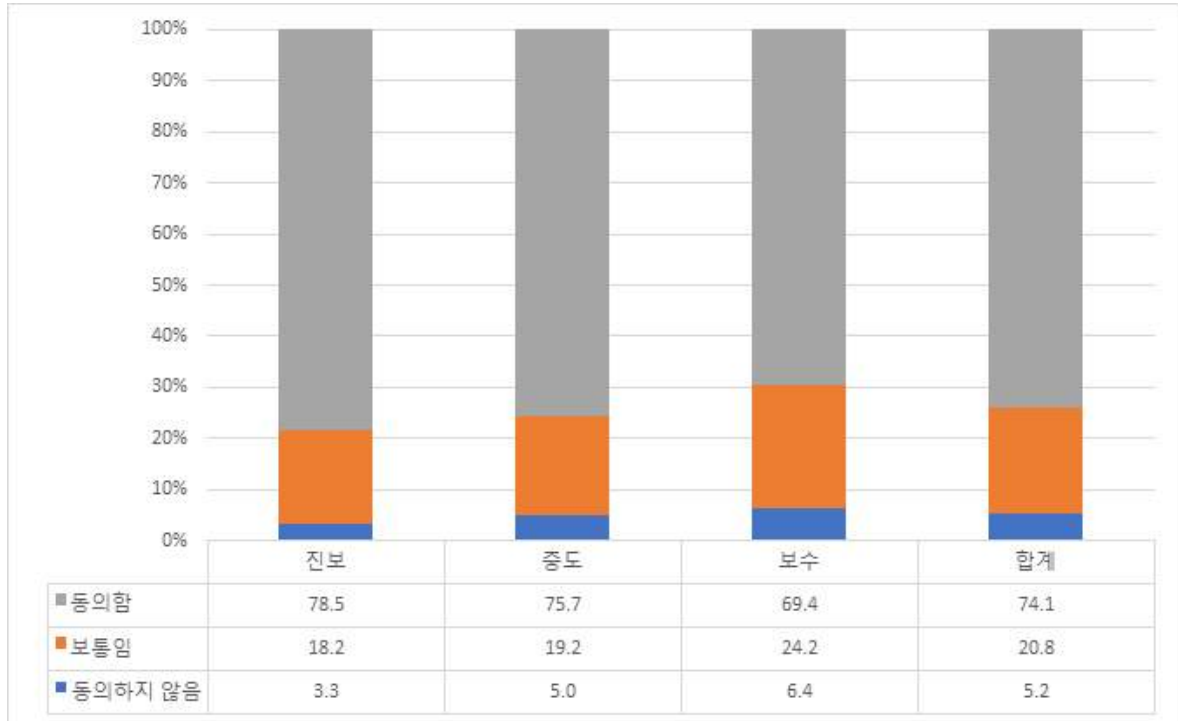
-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은 북한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통일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 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별로 동의하지 않음; 3=보통임; 4=약간 동의함; 5=매우 동의함.
 - 각 문항에 대한 긍정 응답(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을 “동의함”, 부정 응답(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을 “동의하지 않음”으로 코딩하여 위 그래프에 표기하였음.

■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 중국

-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에 무려 70%가 넘는 응답자가 동의함. 이 진술에 대한 비동의 비율은 단 5.7%에 그침. 이는 주변국 가운데 한반도 통일을 가장 바라지 않는 나라로 중국을 선택한 비율이 무려 59.6%에 이른 것과 일치하는 결과임.
-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바라지 않겠지만, 북한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통일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비율이 42.4%에 이르는 점도 통일과 관련해 중국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5. 한중관계 이슈: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중국의 책임

<그림 V - 5> 코로나19 확산의 중국 책임: 이념별 비교



■ 조사 문항

- “중국은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 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별로 동의하지 않음; 3=보통임; 4=약간 동의함; 5=매우 동의함.
 - 이 문항에 대한 긍정 응답(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을 “동의함”, 부정 응답(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을 “동의하지 않음”으로 코딩하여 위 그래프에 표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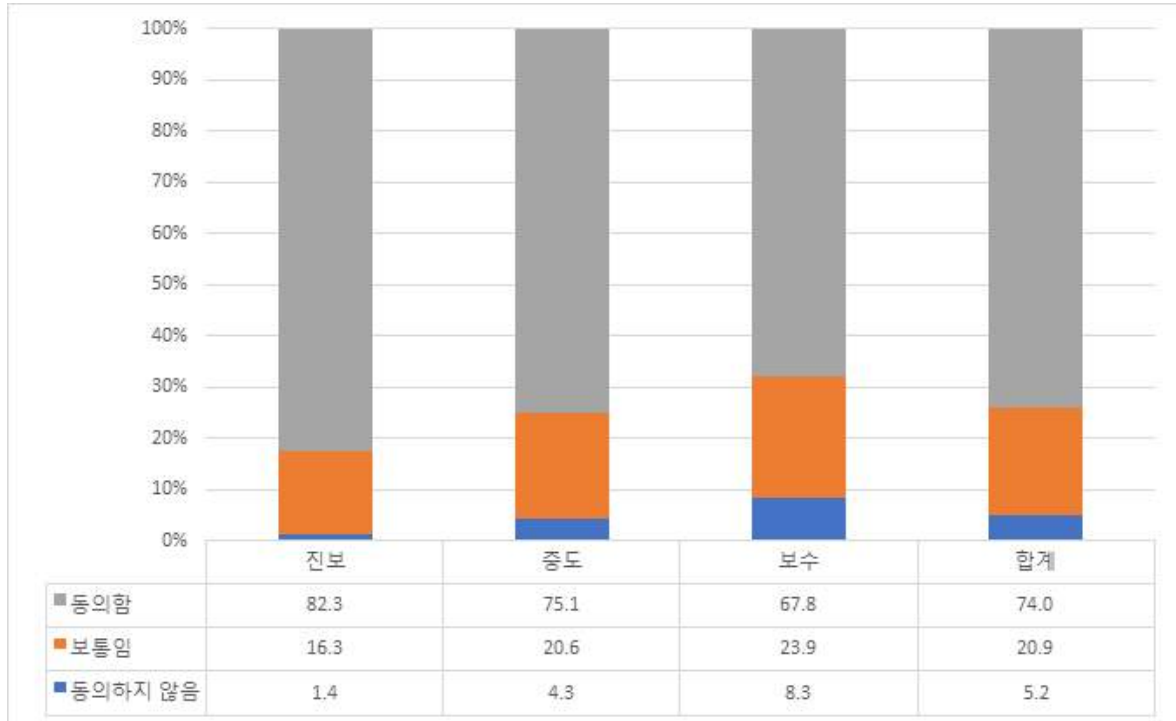
■ 진보는 친중(親中), 보수는 반중(反中國)이라는 단순 도식의 오류

- 코로나19라는 공식 명칭 대신 일부 보수층에서 ‘우한폐렴’이라는 단어를 꾸준하게 사용했다는 점에서 보수층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통념이 형성되어 있음.
- 전체적으로 74.1%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중국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진술에 동의했음. 즉 응답자 대다수가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해 중국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함.

- 통념과는 달리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오히려 진보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78.5%). 이는 진보는 친중국(親中國), 보수는 반중국(反中國)이라는 단순한 도식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줌.

6. 한중관계 이슈: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한 대응

<그림 V - 6>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적극 대응 필요성: 이념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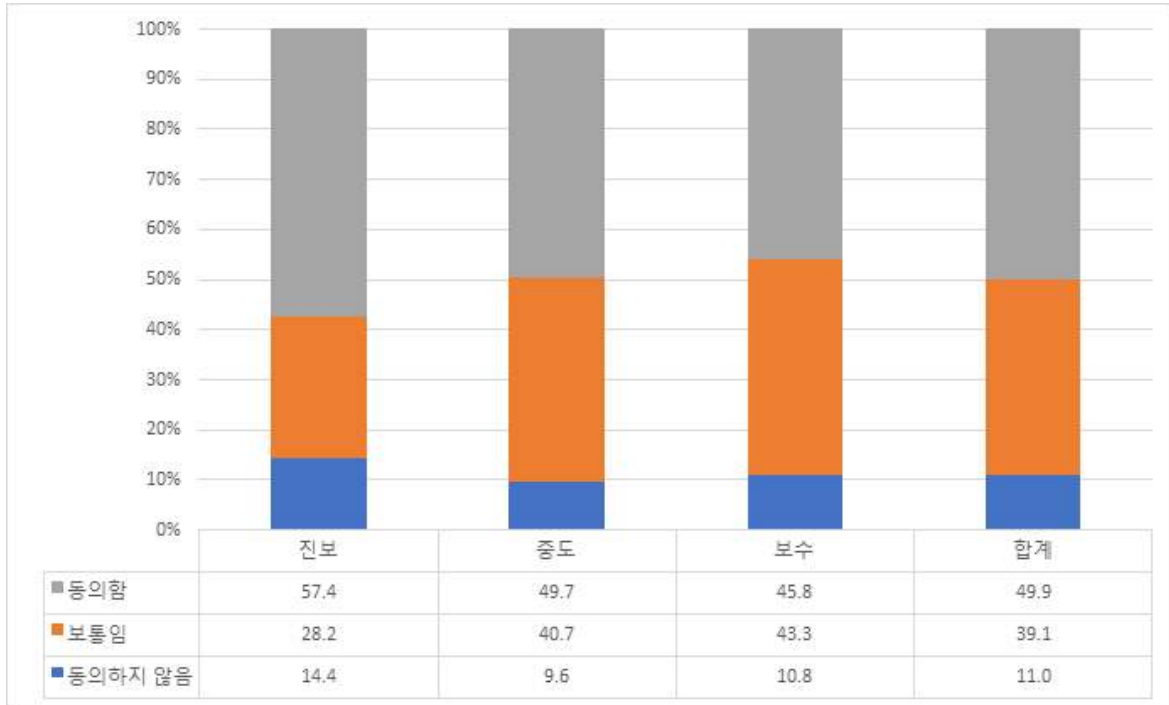
■ 조사 문항

-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한국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별로 동의하지 않음; 3=보통임; 4=약간 동의함; 5=매우 동의함.
 - 이 문항에 대한 긍정 응답(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을 “동의함”, 부정 응답(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을 “동의하지 않음”으로 코딩하여 위 그래프에 표기하였음.

■ 진보가 중국에 강경한 대응을 가장 선호

- 전체 응답자의 74.0%가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에 동의함.
- 그간의 통념과는 달리 중국에 강경한 대응에 동의한 비율이 오히려 진보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82.3%).
- 반면, 보수층에서도 동이가 다수이기는 하지만 그 비율은 67.8%로 그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됨.

<그림 V - 7> 한국의 대응능력 보유 평가: 이념별 비교



■ 조사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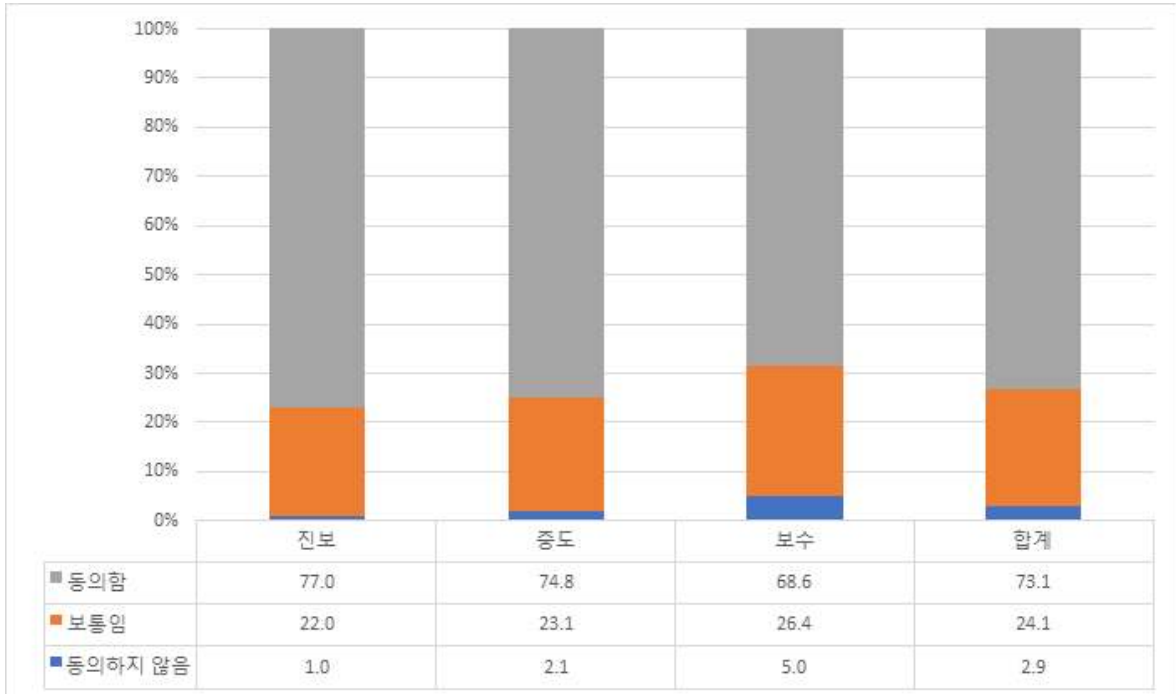
-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한국은 충분히 견뎌낼 능력을 가지고 있다”
 - 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별로 동의하지 않음; 3=보통임; 4=약간 동의함; 5=매우 동의함.
 - 이 문항에 대한 긍정 응답(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을 “동의함”, 부정 응답(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을 “동의하지 않음”으로 코딩하여 위 그래프에 표기하였음.

■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한국의 대응능력 자신감

- 응답자의 절반(49.9%)이 한국이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견딜 능력이 있다는 응답을 선택함.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11.0%에 불과함.
- 진보층에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견딜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보는 비율(57.4%)이 중도층(49.7%)이나 보수층(45.8%)보다 뚜렷하게 높게 나타남.
- 앞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을 선택한 비율이 보수층보다는 진보층에서 더 높게 나온 것과 일치하는 결과임.
- 즉 진보층이 보수층보다 한국의 능력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에 근거해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다고 추론해 볼 수 있음.

7. 한중관계 이슈: 중국의 역사 왜곡 시도

<그림 V - 8>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강력한 대처 필요성: 이념별 비교



■ 조사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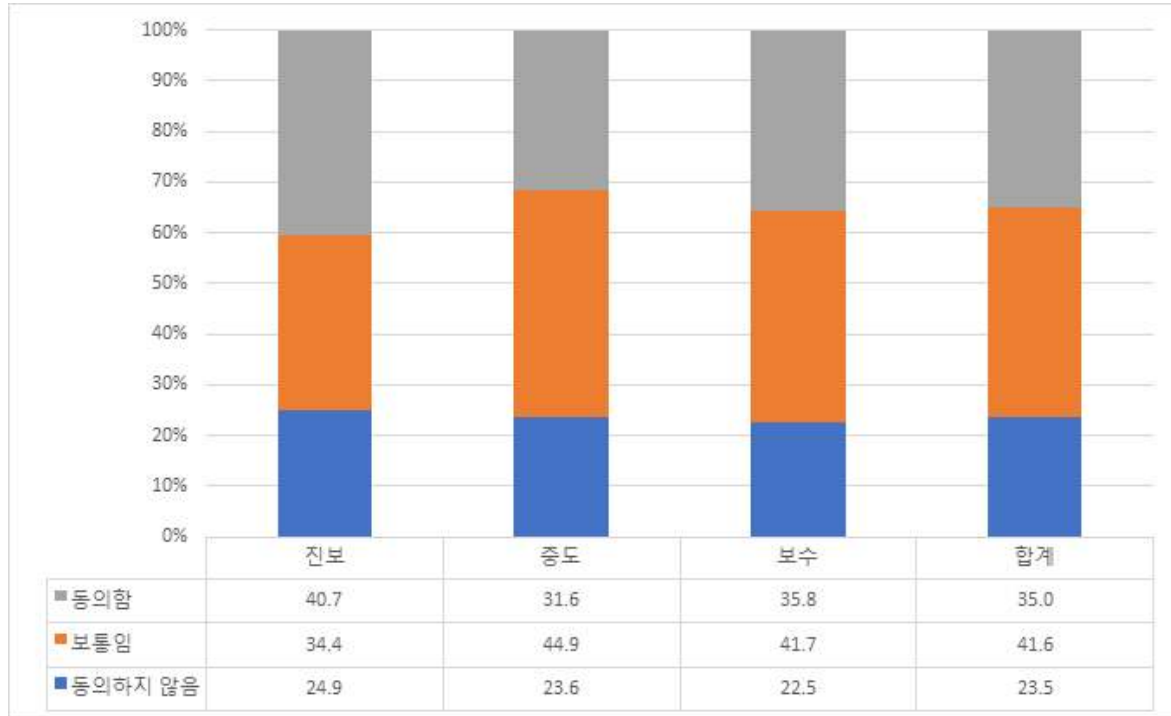
- “중국의 역사 왜곡 시도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 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별로 동의하지 않음; 3=보통임; 4=약간 동의함; 5=매우 동의함.
 - 이 문항에 대한 긍정 응답(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을 “동의함”, 부정 응답(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을 “동의하지 않음”으로 코딩하여 위 그래프에 표기하였음.

■ 진보가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

- 중국의 역사 왜곡 시도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진술에 동의한 비율은 73.1%, 보통은 24.1%,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2.9%에 불과함. 즉 국민 대다수가 강력한 대처를 지지함.
- 앞선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해 강경한 대응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에 동의한 비율이 오히려 진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77.0%).
- 반면, 보수는 68.6%로 그 두 이념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됨.

8. 한중관계 이슈: 홍콩 민주화 운동과 한국

<그림 V - 9> 홍콩 민주화 운동과 한국: 이념별 비교



■ 조사 문항

- “홍콩의 민주화 운동은 중국 내부의 일이므로 우리는 간섭해서는 안된다”
 - 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별로 동의하지 않음; 3=보통임; 4=약간 동의함; 5=매우 동의함.
 - 이 문항에 대한 긍정 응답(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을 “동의함”, 부정 응답(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을 “동의하지 않음”으로 코딩하여 위 그래프에 표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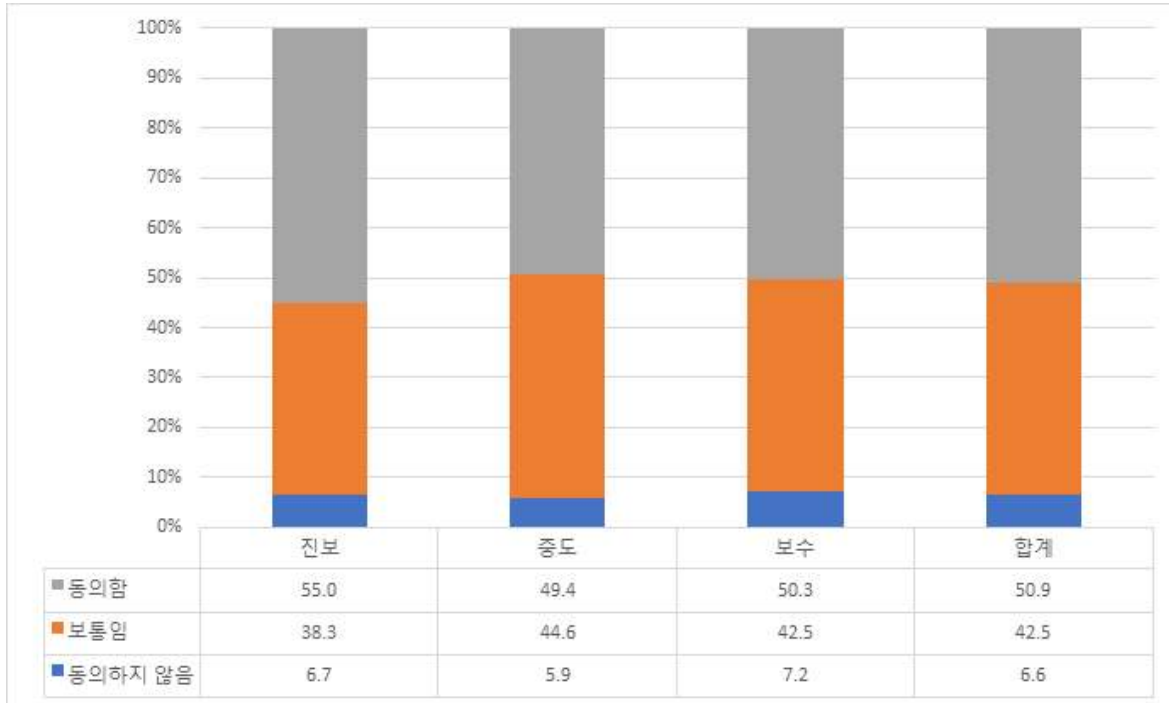
■ 이념에 따라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 다른 태도

-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의견은 이념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임.
- 대체로 진보층에서 찬반 의견이 더 뚜렷하게 갈림. 즉 간여해서는 안 된다고 본 비율이 40.7%,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24.9%로 중도층이나 보수층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진보층 가운데 권위주의 정부에 대항하는 홍콩 민주화 운동에 공감하는 부류와 타국의 내정 간섭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류가 혼재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추론됨.

- 반면, 중도층은 유보적 입장이 44.9%로 가장 높았고, 동의하는 비율은 31.6%에 그침. 이러한 경향성은 보수층 응답자에서도 확인됨.

9. 한중관계 이슈: 중국의 대만 병합

<그림 V - 10> 중국의 대만 무력병합 저지 필요성: 이념별 비교



■ 조사 문항

- “중국이 대만을 힘으로 병합하려 한다면, 한국은 이를 막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 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별로 동의하지 않음; 3=보통임; 4=약간 동의함; 5=매우 동의함.
 - 이 문항에 대한 긍정 응답(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을 “동의함”, 부정 응답(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을 “동의하지 않음”으로 코딩하여 위 그래프에 표기하였음.

■ 홍콩은 중국의 일부, 대만은 중국과 독립된 국가로 인식

- 홍콩 민주화 운동에 간여해야 한다는 의견(35.0%)보다 더 많은 비율이 중국의 대만 무력 병합 저지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응답함(50.9%).
- 홍콩은 중국의 일부로, 대만은 중국과 다른 국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추측함.
- 이 쟁점에 대한 이념별 차이가 통계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유의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